

언론법·비정규직법 개악, 공안 탄압, 대량 해고 ...

# 민주주의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자



이명박 정부가 우익·친재벌이라는 자신의 추악한 생얼굴을 중도·서민이라는 화장 뒤에 가리려 하는 역겨운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천성관 사례에서 보듯이 추악한 본색이 그 정도 화장으로 가려지긴 힘들어 보인다.

‘공안’을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기업주들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범죄를 저질러 온 천성관은 이 정권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 줬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천성관은 사퇴했지만 천성관이 해 온 것들은 끝나지 않았다.

쌍용차 경찰력 투입 시도와 한대련 의

장 연행, 언론법과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에서 보듯이 기업주들과 유착한 부패한 자들이 공안 탄압으로 저항 세력의 손발을 묶어두고서 재벌·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강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도 계속 짓밟고 있고 정부의 지원 속에 기업주들은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살인 해고’하고 있다.

“3차 입법전쟁”도 시작됐다.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한 MB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쪽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쪽의 대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저지하는 쪽

의 일부라고 여겨져 온 민주당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풀며 조건없는 등원을 선언한 민주당은 곧바로 한나라당과 사이 좋게 제국주의 지원의 레바논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친제국주의 세력이라는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그 직후 한나라당과 본회의장 점거 대치의 코미디를 연출하곤 있지만 일관되게 언론법·비정규직법 개악을 저지할지 미덥진 않다.

한편, 박근혜는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이회창 보수연합

설이 불거지면서 친박·친이의 갈등이 다시 벌어지는 듯 하다. 이명박은 박근혜나 이회창 어느 한쪽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처지이지만 보수연합은 양극화를 더 부추기며 이명박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 위기를 땀방아하려던 부자 감세가 엄청난 재정불안정으로 돌아와 감세를 다시 취소하는 상황도 경제 위기의 지속과 심화를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반년간 거듭 실패해 온 MB악법 통과를 또다시 저지하며 정부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 노동자·학생·촛불 시민의 단결과 투쟁

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공안 탄압에도 힘을 모아 맞서야 한다.

특히 언론법 개악에 맞서는 언론노조의 파업, 비정규직법 개악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투쟁, 쌍용차 대량해고에 맞서는 금속노조 투쟁이 중요하다. 기업주와 부자들의 이윤체제를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힘이 발휘될 때 지배자들의 분열과 마비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의 힘을 불러 내 민주주의와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 학생운동 탄압과 ‘보안위해 사범 1백 일 수사’

# 부패한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

7월 15일, 반이명박 학생운동을 이끌어 온 한대련 이원기 의장이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 직후 연설했다. 이는 연이은 학생운동 탄압의 일환이자, 검찰총장 내정자였던 천성관이 낙마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압인 듯하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등 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했으며, 28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제네시스 승용차와 수천만 원 짜리 핸드백을 수차례 뇌물로 받은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앉히려 한 것 자체가 이명박이 말하는 ‘공안’의 실체를 확인시켜 줬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바로 ‘부자천국’이고, 그가 내세운 ‘보안’은 이에 반대하는 정당한 운동을 공격하는 정권지키기일 뿐이다.

정부는 ‘상습시위꾼’ 연행과 더불어, ‘보안위해 사범 1백 일 수사’를 통해 진보 진영 활동가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는 ‘쌍끌이’ 작전을 펴고 있다. 이것은 반이명박 운동에 ‘친박’ 색채까지 씌우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수사대는 집시법 위반 혐의만 있는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잡아 대공본실에 가두고 그제서야 보안법 위반 혐의를 ‘찾기’ 시작했다.

내친 김에 국정원은 DDoS 공격까지 “종북세력”의 소행이라고 우겼다. 방송통신위조차 근거 없다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하님 말고’ 식 마녀사냥이다.

특히, 학생운동이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한대련 의장만이 아니라, 전

한총련 의장 이희철 씨, 2006년 서총련 의장 김하얀 씨, 건국대 총학생회장과 건국대 학생 2명,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행동연대’(이하 ‘대학생행동연대’) 소속 중앙대 학생 등이 연달아 연행됐다. 경찰은 고려대 총학생회장도 길거리에서 연행하려 했다.

진보적 학생운동은 지난해 촛불항쟁의 여파에 적극 발맞춰 학생회 선거에서 대거 당선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대학생행동연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학생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안’ 탄압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첫 속죄양인 쌍용차 파업을 지원하던 서광수 ‘쌍용차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의 집에도 보안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쌍용차 파업 지원 활동, 용산참사 문화제와 노동절 집회 참가 등을 수사는 데 보안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서광수 집행위원장은 경기진보연대 사무처장이기도 한데, 경기진보연대는 김상곤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무상급식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공안’ 물이는 부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전여옥 사건’으로 누명을 썼던 부산민가협 이정이 대표는 또다시 보안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받았다. 단지 615 부산분부가 615 북측해외측 위원회가 보낸 축전을 읽었다는 이유 때문이다(게다가 이 축전 내용은 이미 통일부 신고까지 마친 것이다). 이 사건들은 이명박이 정부에 맞선 정당한 운동을 보안법 위반과 연결시키려 한다는 또 다른 증거다.

이처럼 보안법을 이용한 최근의 ‘공안’ 탄압은 그 진정한 목적이 ‘친박적 사상과 행위’를 빌미삼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반대는 민주 수호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종합



세상을 움직이는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자  
선하고픈 기분이 아니다”  
- 이명박의 재산 헌납에  
대한 <워싱턴포스트>의  
예리한 분석

“신개념 돈세탁”  
- 이명박의 재산 헌납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하는  
데,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 기업주들에게, ‘친서민’ 에  
대한 오해 말라는 이명박

경기도의원 이천우 : “무조건  
적인 무상급식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포퓰리즘입니다”  
동료 의원들 : “완벽한 분석  
이야!”, “말 시원하게 잘하  
네!”

- 잘들 논다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  
했다]”  
- 국제청장 내정자 백영호의  
책 사랑? 땅 사랑!

주성영 : “[천성관은] 보기 드  
물게 청렴하게 살아왔다...  
아들 결혼 때 청첩장도 안 돌  
렸는데 사실이냐, 결혼을  
어디서 했냐”  
천성관 : “조그만 교외에서  
5월에 했습니다”  
- 6성급 호텔이  
조그맣다던 청문회장의 코미디

“[쌍용차에서] 해고된 9백여  
명과 외부 세력들이 들어가  
서 소위 자살특공대처럼 행  
동하고 있다”  
- 입으로 배설하는  
경기도지사 김문수

“저 외엔 서울대서 대통령  
된 사람이 없죠”  
- 학벌이 의미 없음을  
입증해 온 김영삼

용산 참사 반년

## 지금도 계속되는 ‘재벌천국 서민지옥’ 의 아비규환



이명박 정부가 용산에서 끔찍한 살인  
을 저지른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 희생자들은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  
다. 진실은 여전히 불구덩이 속에 묻혀 있  
는데 살인 공범들은 뻔뻔스레 목을 쳐들  
고 다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반년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줬지만 이명박 대통령만 나 몰라라 하  
고 있다”고 절규한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시신을 공  
개해 거리로 메고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지옥 같은 불길과 고통 속에서 살이 찢  
어져서 부러진 뼈가 드러나 있고, 유가  
족 동의도 없는 부검으로 두개골까지 갈  
라진 시신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피눈물  
을 흘리며 공개하려는 것이다.

용산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른 반년 전  
1월 20일 아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한  
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멎는 충  
격 속에 이 살인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다짐했다.

희생자들은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  
다가 하루 만에 ‘죽어서’ 내려왔다. 용역  
강패를 앞세운 폭력적 재개발이 진행되  
면서 고 윤용현 씨는 아들뻘밖에 안되는  
용역에게 두들겨 맞았고, 고 이상람 씨는  
머느리 앞에서 용역에게 목살 잡히고 뺨  
을 맞았다. 이런 치욕을 당하고 삶의 터전  
을 강탈당해 일흔 노인까지 망루로 올라  
가 경찰특공대와 맞선 것이다.

한겨울에 망루로 올라간 희생자들에게  
쏟아진 것은 뼈까지 얼게 하는 물대포였다.  
농성 시작 후 3시간 반 만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됐고 18개 중대 1천4백 명의 경찰이  
망루를 에워쌌다.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전격 투입돼 살인 진압을 시작했다.

그것은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참여하는  
수조 원이 걸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속도  
전’이었다. 대통령 측근들이 ‘봄에 대졸  
실업자가 쏟아지면 제2의 촛불이 불붙을  
지 모른다’고 걱정하던 상황에서 그 불씨  
를 끄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 “서울 한복  
판”에서 저항하는 철거민들을 속죄양삼아  
정권의 무자비함을 과시한 무력시위는 여  
섯 명의 끔찍한 죽음을 불렀다.

### 피눈물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비극을 접  
하고 경악하며 슬퍼할 때 36억 원 부동산  
부자인 용산구청장 박장규는 “폐잡이들  
이 데모를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 그  
럽니다” 했다. 95억 원 부동산 부자인 청  
와대 부대변인 김은혜는 “과격시위의 악  
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인간 말종들은 “도심 테  
러”, “자살 테러”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명박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 내정자인 살인마 김  
석기를 감쌌다.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  
한 조중동의 두 번 죽이기·세 번 죽이기는  
또 얼마나 잔인하고 역겨웠던가.

궁지에 몰리던 용산 살인범들에게 강  
호순 연쇄살인사건은 “긍정적 프레임으  
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청와대 행  
정관)였다. 그들은 강호순을 고마운 구  
세주로 여겼다. 그 틈에 ‘철거민들이 스

스로 불을 내 죽었다’는 ‘진실 살해’ 수  
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또 다른 살인 공  
범이다. 하지만 살인정권에 항의해 거리  
로 나선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인  
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 그 힘이  
결국 김석기도 사퇴시켰다.

반년이 지났지만 용산 살인 공범들의 범  
죄는 끝나지 않았다. 재벌들은 용산에서  
용역강패들을 앞세운 폭력 철거를 재개해,  
유가족과 신부님들까지 패대기치고 있다.  
경찰은 용산 참사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살인 훈련’을 하며 우리 가슴에 또 대못  
을 박았다. 검찰은 수사 기록 3천 쪽을 한  
사코 숨기며 범죄 은폐를 계속하고 있다.  
이 범죄 집단들을 데리고 ‘재벌천국 서민  
지옥’을 완성해 완전범죄를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도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 품에 안겨 단 한 번이라도 사랑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  
지옥에 간다는 조건이 붙는다 해도, 아버  
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절규하는 유  
가족들의 눈물도 마르지 않았다. “아이들  
에게 너희 할아버지는 대쟁이라고, 스스로  
불 질러서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  
다”, “돈없고 뺨없는 우리 철거민 같은 사  
람들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절규도 멈추지 않았다.

망루 위에서 두 팔로 하트를 그리던 희  
생자들을 기억하며, 이미 덜거덜인 지 오  
래인 이명박 불도저를 더 빨리 폐차시키  
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분노와 투지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 MB의 예술 장악과 대학 구조조정에 맞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투쟁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사태’  
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우  
파정부선 우파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문화  
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의 말에 분명하게  
드러나듯 한예종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코  
드인사를 심어 한예종을 우파적으로 구조  
조정 하려는 의도 때문에 시작됐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역지스런 표적감사  
를 통해 황지우 총장 사퇴와 교수직 박탈,  
진보적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이론학과 축  
소, 서사창작과 폐지, 통섭교육(학문간의  
통합적 교육) 중지 등 비민주적 구조조정 방  
안을 발표한 이후 이에 맞선 저항이 계속되  
고 있다.

뉴라이트 단체 문화미래포럼 소속 예술  
대 교수들은 한예종을 해체·축소해서 타  
대학과 통폐합하는 민영화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예종 구조조정 방안은 한예  
종 해체·민영화 방향의 시작이라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는 전제적인 국공립대 민영화  
과정의 일부다.

황지우 총장 사임 이후 최근 진행되고 있  
는 총장 투표도 학생들의 알권리가 차단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 소  
견발표회에 간 학생들에게는 참관조차 허  
용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보낸 질의서에 답  
변도 없었다. 한예종 사태를 걱정하는 교  
수·동문·학부모·학생 등이 꾸린 ‘한예  
종 사태 대응 연석회의’가 후보들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이조차 허  
용하지 않았다.

한예종은 정부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총장을 직접 뽑지 못하고 교수들의 투표에  
서 1, 2위를 한 총장후보를 문화부에 추천  
하면 문화부에서 1명을 선택해 대통령이 임  
명하게 돼 있다. 결국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부의 MB 코드 인사가 차기 한예종  
총장이 돼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한예종 구  
조조정 계획을 추진할 확률이 높다.

이런 비민주적인 총장선거와 한예종 구  
조조정 계획 등에 맞서 학생들은 계속 투쟁  
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5월 말 학생들 5백  
여 명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  
고 지난 두 달간 문화제, 1인 시위 등 다양  
한 행동을 해 왔고 한예종 문제를 사회적으  
로 알려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다. 한예종  
총학생회와 비대위는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에 참가하는 등 이명  
박의 민주주의 파괴에 반대하는 전 사회적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7월 29일에는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가하  
는 “한예종 ‘감사’ 파티 점핑투게더”를 진  
행할 계획이다. ‘점핑 투게더’는 이명박의  
예술 장악, 비민주적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즐겁게 한예종 투쟁  
에 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선영

## 재벌·다국적기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할 한·EU FTA

7월 13일 이명박은 한·EU FTA 협  
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  
제 타결인지 이 정권의 고질적인 ‘성과  
뺑뺑이’ 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그런  
데도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제 세계  
최대인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 일자  
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드러났듯이,  
FTA는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무역협  
정이 아니다. FTA는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만드는 포  
괄적인 경제통합 협정이다. 전 세계 지  
배자들이 관세율 조정 협상이 아니라  
FTA를 체결하려고 애쓰는 진정한 목적  
은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돈벌이 장

을 크게 넓히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한미FTA를 위한  
광우병 위험 최고기 수입으로 다국적 식  
품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식품안전을 심  
각하게 훼손했다. 또, 의료 민영화나 교  
육 시장화, 그리고 물·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도록 해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다.

정부가 한·EU FTA 협정문조차 아  
직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  
지만 지금까지 언론 발표들을 보면, 한  
번 개방하거나 민영화한 조치를 되돌릴  
수 없는 ‘역진 방지 조항’, 다른 나라에  
허용한 것을 똑같이 허용해 줘야 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 등 한미FTA에 있던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제수역

사무국(OIE)의 기준에 기초한다고 해, 광  
우병이 여러 차례 대규모로 발발한 유럽  
일부 국가의 최고기 수입 여지마저 열어  
놓았다고 한다. 정부가 금융위기에 개입  
할 수 있는 조처인 ‘금융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미FTA(1년)보  
다 더 악화해 6개월로 한정됐다.

민간위탁 형태로 물 민영화의 촉진  
제가 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다국  
적 물 기업 중 상위 10위권 기업들 대  
다수가 유럽계 기업이어서 유럽연합은  
한·EU FTA에서 서비스 부문에 큰 관  
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적  
인 물 기업 베올리아와 온데오가 한국  
수도 사업에 진출해 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도 큰 문제가 될 텐  
데, 예를 들어 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그대로 비준·발효될 경우  
의약품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동자·서민의 피해는 확실  
한 반면, 수출이 65억~1백10억 달러 늘  
어나고 GDP가 20조 원 정도 늘어날 것  
이라는 보수 언론들의 기대는 달성될 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설사 달성된다고 하  
더라도 그 혜택은 재벌들의 주머니로 들  
어갈 것이다.

모든 FTA의 본질은 노동자·서민의  
삶과 노동권·환경권·건강권·공공성  
을 파괴해 소수 가진자들과 재벌, 다국  
적기업의 배만 불리려는 정책이다.

재벌·다국적기업의 천국을 재촉할  
한·EU FTA의 승인·체결을 막아야  
한다.

강동훈 기자 kah@left21.com



반이명박 연대체 활동 평가와 과제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진보 진영은 이명박에 맞선 다양한 연대체를 건설해 왔다. 이 연대체들 중 민생민주국 민회의와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 함께 활동가 **최영준, 박성환**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진보 진영이 경계할 바에 대해 말한다.

6·10범국민대회 이후 이명박의 지지율은 20.7퍼센트(6월24일 리얼미터 조사)였다. 특히, 20대 92퍼센트, 30대 83퍼센트, 40대 75퍼센트가 이명박의 어떤 정책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세대가 이명박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이명박은 이런 대중적 반감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도 이어지는 시국선언을 위축시키려고 교사와 공무원 시국선언자를 본보기 삼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시국선언 교사 명단 확보를 빌미로 전교조 사무실을 침탈하기도 했다. 또, 대량 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한편, 아래로부터 저항 때문에 그동안 미뤄 온 비정규직 악법과 언론 악법 등 반민주·반민생 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한 “지배계급 헤게모니의 두 측면인 강제적 ‘지배’와 도덕적·지적 ‘지도’” 가운데 이명박은 후자가 거의 결여된 반쪽짜리 정부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 이명박에 맞서 진보 진영이 파편화해 각개약진하지 않고 큰 연대를 이루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 독주에 맞서 공동의 저항 활동”을 다짐하며 (가칭)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급진좌파 단체들이 구성한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도 위크숍을 통해 ‘이명박 퇴진’을 공식화하고 진보 진영의 힘을 결집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흐름 속에 7월 19일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비정규직 해고, 언론악법 강행, 4대강 죽이는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이하 7·19범국



6·10범국민대회 – 진보 진영은 이명박에 대한 적극적 분노를 모아 운동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사진 임수현

민대회)를 시청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6·10범국민대회에 이어 이명박에 맞서는 두 번째 대규모 집회가 될 것 같다.

7·19범국민대회는 참가 규모에서 6·10범국민대회를 능가할 순 없었지만 내용에서 한 발 전진하고 있는 듯하다.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해고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등 노동계급의 요구를 추가했고,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의 초점인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결의대회(‘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국민대회’)를 결합시키기로 했다. 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명박이 ‘더 밀리면 견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언론악법 강행 처리 등 배수진을 치는 시점에 열리는 7·19범국민대회는 이명박에 맞서 힘을 결집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양편향

진보 진영이 이명박에 맞서 효과적인 투쟁을 하려면,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지난 6월 말 민생민주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악법 유예 시도에 맞서 불필요한 타협을 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가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굳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비정규직법은 6개월 또는 1년 유예”로 한나라당과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과 공조하려고 정치적 비판을 삼가고 침묵했다.

게다가 7월 2일 ‘비정규직법 유예 시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작성한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됐다”는 기자회견문을 민생민주국민회의 소속 주요 단체(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들이 수용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하승창 운영위원장조차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보호에 실상 유명무실하다”며 “당시 이법에 암묵적 동의를 보낸 필자 본인을 포함한 일부 시민운동”(〈프레시안〉)도 문제였다고 시인할 정도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당과 함께해야 한다”(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거나 “민주당을 과거 전례에 비취 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한국진보연대 운용배 조직위원장) 하라며 더 커다란 적과 싸우기 위해 ‘계급적’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큰 틀의 연대를 강화하자는 ‘물지마 반MB공조’는 기회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

진보 진영은 ‘공공의 적’ 이명박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 일시적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정치적 비판을 자제한다면 항의 운동 참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정부 하에서 격렬하게 저항해 온 자신들의 행동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반면, 이명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반민주·반민생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공동행동’은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다는 일부 급진좌파의 종파적 태도 때문에 대중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 살인 진압이 벌어진 지 6개월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7월 11일 처음으로 용산법대위, 민생민주국민회의, 4대 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야4당 공동주최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행동’은 민주당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공동주최를 거부했다. 심지어 언론악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민주당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공동투쟁을 주저하고 있다.

조직 상의 몇 가지 문제

한편,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결성 초기 ‘다함께’를 비롯한 일부 급진 좌파의 반대로 민주당 가입이 유보되자 민주당과 상시적 공조를 위해 ‘야4당과 함께하는 연석회의’ (이하 연석회의)라는 비공식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주요 세력인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는 ‘연석회의’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과 정책적 공조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는 비공식 논의 테이블이 6·10범국민대회 준비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민주회복 범국민위원회’ 결성 논의를 중단시켰다. 또, 7월 2일 ‘비정규직법 유예 시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소속 단체들도 모르게 비민주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을 미화한 문제의 기자회견문도 소속 단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려 했다. 진보신당의 반발로 초안이 수정되긴 했지만 ‘다함께’는 나중에야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됐다. 이것은 토론과 논쟁, 그리고 다수의 지지에 근거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배제해 조직을 비민주적으로 만든 것이다.

반면, ‘공동행동’은 한 단체가 반대하자, 다수의 견해를 묻지도 않고 7월 11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공동주최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행동’은 대다수가 지지해도 한 단체만 반대하면 아무 행동도 조직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합의제 방식은 ‘공동행동’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모든 연대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동통일을 추구하지만 특정 쟁점에 대해 이견은 항상 존재한다. 이럴 때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기초해 행동해야 한다. 이견이 첨예할 때는 다수의 지지를 존중하는 게 민주적이다.

진보 진영은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한편, 민주당과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금의 대중적 분노를 하나로 모아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대중적 분노를 담아 낼 연대체는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출간!

**2호(2009년 여름호, 15,000원) 목차**

자발성, 전략, 정치 \_ 크리스 하먼  
네그리와 하트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지키기  
세계의 노동계급 \_ 크리스 하먼  
세계화,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국의 성장통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2009년 노동조합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인터넷 민주주의 \_ 신화와 현실  
조직자 (소셜리스트 워커)  
민주집중제에 관한 메모

**1호(2009년 봄호, 12,000원) 목차**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세계화와 신경제라는 신화  
'다중 지성'은 유효한 개념인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에 부쳐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노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소영 교수의 알튀세르주의  
촛불운동과 다함께  
용산참사 항의운동 참가 경험을 돌아보며  
파병반대국민행동 논쟁사

구독 신청 문의  
Tel 02 2271 2395 / Fax 02 2271 2396

**플라주 ⑥**

플라주는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데 다양한 세상 사는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일루전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서울대앞)  
인사점 (건국대앞)  
풀무집 (성균관대앞)  
이음책방 (대학로)  
녹두 (동국대후문)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 이명박의 언론법 개악을 또다시 좌절시켜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국회의장 김형오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네 달 만에 다시 상정된 법안에는 미디어발전위에서 논의된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악법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신방 겸업을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미 지난 2월에도 KISDI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계산법에 따르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MBC 앞에 있는 식당, 버스 기사, 택시 기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미국 노동통계청의 통계는 미국이 미디어 소유 제한을 푼 1996년 이후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종사하는 기자와 아나운서가 1만 명 이상 감소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거짓말이었다. OECD 30 회원국 중 21 나라가 신문 방송 교차 소유를 제한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같은 지역에서는 신문과 방송을 모두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언론법 개악을 위해 내세운 모든 주장이 통계 조작과 엉터리 자료에 근거를 뒀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언론악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고 이에 맞선

이명박 정부는

조종동처럼 노동자·서민 들을 사기저하시키고 이간질하는 데 능수능란한 자들이 신문·방송을 더 많이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것이다.

저항을 분쇄하려면 경찰 활동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조종동처럼 노동자·서민 들을 사기저하시키고 이간질하는 데 능수능란한 자들이 신문·방송을 더 많이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 한다.

또 재벌과 조종동의 방송 진출을 도와 친정부·여당 세력을 강화해 권력 장악과 재창출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 급진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도는 너무 뻔히 보였다.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시도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면서 ‘MB악법’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의 갖가지 시도는 연거푸 좌절돼 왔다.

특히 언론노동자들의 단호한 파업 투쟁으로 두 차례나 좌절된 언론악법은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고



지난 파업에서 조종동 방송 반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준 언론 노동자들 사진 임수현

지’가 돼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이 고지를 차지하지 못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으로 매달릴 언론악법을 저지하려면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새로운 언론법 개정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회에 등원한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2월처럼 어정쩡한 타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민주당이 제시한 지분 제한으로는 독점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투쟁의 선두에 설 MBC노동자들을 비롯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이 관건일 것이다. 지난 2월에 파업 동참을 약속한 KBS노조 지도부가 발을 빼려는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KBS 기자협회, PD협회 등은 필요하다면 노조의 공식 파업 선언보다 먼저 투쟁에 나

설 수 있어야 한다.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노총도 최대한 동력을 끌어모아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이 이번에 또다시 ‘고지’ 탈환에 실패한다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과 용산참사 항의 투쟁 등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투쟁들이 승리할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이다.

정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 기고 — 비정규직법 개악 논란

# 왜곡된 구도를 깨고, 안정된 고용의 권리를 주장하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뉴코아·이랜드 계약직 노동자들은 계약이 해지됐다. 2008년 7월 1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1년 넘게 지속될 당시, 노동부는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면서 화려한 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9년 7월 1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대량해고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내서 “비정규직은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법이라고 오해하는데, 진실은 2년이 지나도록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비정규직을 위하는 법이라고 했다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법이라고 실토하는 정신분열적인 노동부의 태도는 이 비정규직법안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렇다. 이 법안은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쓰고 해고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래서 파견허용업종도 마음대로 늘리고, 기간제 노동자들도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정규직은 언제라도 쓰고 싶을 때 쓰고 자르고 싶을 때 자르면 되는 존재이기에, 기업들은 비정규직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1.2년에 불과하고, 원청대기업에게 수탈을 당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근속년수가 1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2년

을 넘는 비정규직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제 ‘안정된 고용의 권리’는 흔적이 없다. 비정규직은 계약해지를 당해도 항의하지 못하고 이런 해고는 기업의 권리로 인정된다. 안정된 고용의 권리를 뿌리째 흔들고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로 왜곡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법의 효과다. 이 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삶에 순응하게 되고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떨어지고 삶의 전망도 무너진다. 비정규직법은 이렇게 삶의 의지를 놓쳐 가는 비정규직들에게 ‘더 이상 안정적인 고용은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해고대란’ 입증용 희상양이 된 노동자들

비정규직법 자체가 노동자들을 쉽게 자르고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는 사용기간 2년 제한조차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해고된다고 하면서 원인을 교묘하게 조작한다. 기간제한조차 없애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쓰게 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그러기에 그들은 비정규직 사용 2년 제한 조항 때문에 해고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만 드러낼 뿐, 노동의 불안정화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는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삶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 동안 ‘정규직 전환 효과’가 뚜렷하므로 현행법을 유지하자고 말한다. 그들은 법이 결국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법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극히 일부 정규직(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만 보여 준다.

### 왜곡된 논쟁을 걷어치우자

비정규법 시행 전부터 상시적으로 일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 비정규직을 일상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이 노동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야 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이들 중 극히 일부를 정규직화하거나 혹은 또다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화하거나 혹은 해고했다. 그것이 지난 2년간 있었던 일이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 송파구청과 부평구청 계약직들의 투

쟁이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정규직 전환 요구 투쟁이었다. 그 일부를 따서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효과’라고 부르고 한나라당은 ‘대량해고’라고 부른다.

그렇게 정리되고 남은 상시고용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최후로 정리할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유예안이며, 대량해고설을 핑계로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간제한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속셈이다. 그러다보니 공기업에서 더 많은 해고가 상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KBS 계약직노동자들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투쟁하는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이 상시적으로 일해 왔기에 현재의 상황에 분노를 느끼고 투쟁하는 것이다. 만약 이 노동자들이 정리돼 버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다시 사라지고 일상적인 불안정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 많은 이들은 더 이상 투쟁할 의지와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비정규직법의 본질적인 문제를 더 많이 드러내야만 한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저들의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가, 예외적인 고용형태로 보는가’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와 파견제 등 기간을 정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상시고용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 10년 동안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투쟁을

쉬지 않았다. 그 길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보장 입법요구’를 만들었다. 지금 있는 기간제법을 없애고 근로기준법에 상시고용의 원칙과 사용사유를 명시하는 것, 중간착취만 합법화해주는 파견법을 없애고 직업안정법을 강화하는 것,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노동자 개념을 넓혀서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왜곡된 고용형태를 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책상 위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나온 법이며, 이 요구가 관철돼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요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간제한 2년을 없애거나 유예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행법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줘야 하는가”하는 왜곡된 논쟁을 걷어치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이다. 물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이 관철돼도 비정규직은 여전히 편법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비정규직이 잘못된 고용형태고 누구나 안정된 고용의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럴 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정에 저항하는 많은 비정규직들이 생겨날 것이다. 진정한 권리는 바로 그렇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힘에 의해서 쟁취된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기에는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이 뿌리부터 잘못된 것이며, 우리에게는 안정된 고용의 ‘권리’가 있음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노동

50일을 훌쩍 넘은 쌍용차 점거 파업

# 실질적 연대 파업으로 ‘살인 해고’ 의 싹을 자르자

쌍용차 사측은 지난 6월 27일 파업 노동자들의 놀라운 투지와 투쟁에 밀려 하루 만에 용역강패와 구사대를 데리고 공장에서 쫓겨난 후 온갖 비열한 짓을 해 왔다.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 단수·도시가스 중단 시도를 하고, 심지어 가족 상봉과 의료진의 방문 치료마저 통제해 파업 노동자들로부터 “인간도 아니다” 하는 원성을 샀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측 뒤엔 경찰이 있다.

경찰은 사측의 경찰력 투입 탄원서를 기다렸다는 듯 지난 11일 공장 출입구 네 곳으로 밀고 들어와 사측에게 본관을 확보해 줬다. 또 연대 투쟁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금속노조 지도부 등 44명에게 출두 요구서를 보냈고 금속노조 경기본부장을 연행하고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사측과 경찰의 탄압은 파업 노동자들 9백여 명의 사기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12일에는 경찰의 봉쇄를 뚫고 노동자 20명이 파업에 다시 합류했다. 경찰은 수시로 헬기를 띄워 협박하지만 견고해지는 바리케이드만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쌍용차라는 배를 좌초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인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6월 27일) 우리(용역강패와 구사대) 2천 명이 민노총 등 30명의 조직적 싸움을 못 당해 내더라... 힘도 안되고 공권력도 안되고”라고 한탄하면서 “노조가 수정안을 내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물론 “구조조정 하겠다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파업 노동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기 어렵고 7월 중순 이후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등이 예정된 상황을 의식한 기만적 후퇴 시늉일 뿐이다. 박영태가 노리는 것은 “겉으로 유연한 입장처럼 보이게 하여” 희망퇴직과 3년 무급순환휴직 인원을 늘리려는 속셈이다.

그런데, 강력한 연대 투쟁을 통해 사측의 기만적 후퇴 시늉을 진정한 후퇴로 발전시켜야 할 이 때, 우려스럽게도 일부에서 양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노조는 정리해고 결사 반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가 안 팔리는데 정리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다 죽는 길”(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이라는 말도 나오고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노사 동시 양보’론을 계속 띄우고 있다.

## 누가 양보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미 지난 몇 년간 쌍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3천7백여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이번에도 1천7백여 명이 강제로 ‘희망’ 퇴직당했다. 그 결과 “회사 쪽은 처음 시작했던 구조조정 목표치의 80퍼센트를 달성”했으면서도 “나머지 20퍼센트 남은 이 중 또 80퍼센트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한상균 지부장)

하지만 쌍용차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책임은 먹튀 자본 상하이차와 정부에 있다.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 양보론’은 50일 넘게



쌍용차에서 ‘살인 해고’를 멈추려면 금속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에 나서야 한다

사진 이운선

점거 파업을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쌍용차 파업이 승리하길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최근 평택시장이 노사 간 ‘중재’를 자처하는 분위기가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 지도부와 쌍용차파업지도부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타결 내용을 결정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리해고 철회·분사 철회·비정규직 고용 보장이라는 원칙도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헛된 양보교섭에 매달리며 파업 노동자들을 김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어

제3자에 매각하려는 사측과 정부에 맞서 국유화(공기업화)라는 대안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 쌍용차를 망친 책임자들인 상하이차와 채권자들의 지분과 채무를 소각해 버리고 국가가 쌍용차를 인수해 고용을 책임지는 게 옳다. 공기업화는 경제위기 시대에 회사의 파산·부도로 고용불안을 겪는 모든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다.

쌍용차 파업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와의 한판 승부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실질적인 연대 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으로 기업주들의 이윤에 타격을 입히고 이명박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과 연대 호소가 금속노조를 다시 움직였다. 지난 1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주 1회 이상 파업 등을 결정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결정이지만 현장의 투사들은 이 결정을 이용해 위력적인 연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쌍용차와 경쟁 관계인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등의 잘나가는 동종차량(SUV, 대형 세단) 라인이 실제로 멈춰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연대 파업이라는 우리의 무기로 이윤에 상당한 타격을 입혀야 한다. 연대 파업에 맞춰 수만 명이 평택공장에 집결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힘과 자신감을 줘야 한다.

모승훈 현장 통신원

기대에 못 미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쌍용차 연대 투쟁 결의

## 현장에서 공세적인 연대 투쟁 건설이 중요하다

정부와 경찰, 사측, 보수 언론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함동 공세를 펴는 지금,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점에서 금속노조 임시 대의원대회 결정은 다행이면서도 아쉽다. 7월 1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입단협 타결과 임원 선거를 8월 중순까지 연기하고 주 1회 이상 파업 등을 진행하는 쌍용차 연대 투쟁 계획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실 이는 “쌍용차 승리 전 입단투 타결 유보와 즉각 총파업 투쟁” 등의 결정을 호소한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즉각 총파업 선언을 촉구한 대의원들은 이미 경찰이 공장에 진입했으므로 ‘경찰력 투입시 총파업’이라는 기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제안들은 격한 논쟁 끝에 부결됐다.



조성준은 말한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결의가 만능이 아니다. 할 수 있는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일부 현대차 대의원들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안전이 부결된 점을 들어 파업 조직의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날 한 대의원의 지적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쌍용차에서 막지 못하면, 이제 전국에 정리해고 광풍이 불어 올 것”(쌍용차지

부 호소문)이기 때문이다.

14일에 경찰청은 청장 강력하키 직접 주재해 쌍용차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작전계획이 논의됐다고 한다. 평택 공장은 도장공장을 제외하곤 이미 경찰과 용역의 땅이 됐다. 도장공장 침탈이 당장 쉽게 이뤄지진 않겠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금속노조의 현장 활동가들은 대의원대회 결정을 이용해 현장에서 공세적으로 연대 투쟁과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다행히 기아차지부가 15~16일 6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완성차 연대파업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순간 이를 공권력 투입으로 간주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7월 11일 금속노조 성명)이라는 경고가 투쟁의 기세로 분출돼야 할 때다.

김문성 객원기자 | enlucha@left21.com

## 투쟁에 나서는 기아차 노동자들

7월 15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드디어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15일은 선거구별 교섭보고대회와 주야 6시간 파업을 하고 16일 역시 6시간 파업 돌입 후 노동자들 수천 명이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달려가 연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개월간 15차례의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동결과 신입사원 임금 10퍼센트 삭감을 종용하고, 4년 전에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생명을 단축시키는 심야노동을 없애고 주간에 연속으로 근무하는 제도)와 월급제 요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참을 만큼 참아 온 기아차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9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71.6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6월 30일에 열린 파업 선포식에는 지난 4~5년 사이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투쟁의 열의를 보여 줬다.

기아차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은 정리해고에 맞서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눈물겹고 영웅적인 투쟁에 있음이 분명하다.

7월 1일 쌍용차 연대파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잘못을 범했던 기아차 지도부가

지금부터라도 파업에 나선 것은 반가운 결단이다.

이제 기아차 노동자들은 금속노동자들의 꿈인 주간연속 2교대와 월급제를 정취하기 위해 더욱 단호한 각오로 파업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쌍용차의 정리해고 분쇄 투쟁이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강력한 실천으로 연대해야 한다.

공장을 멈추고 거리로 나가 강력한 집회와 행진을 하며 이명박을 압박하는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대의원

##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통합 추진에 대해

7월 8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현장조직 초청 토론회’가 있었다. 다함께, 노동전선, 전국회의, 현장실천연대, 혁신연대, 울산혁신네트워크(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전진은 토론문은 냈지만 공식 불참했다). 지난 1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만들어진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노동운동 내 현장조직과 의견그룹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토론회를 기획한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통추위의 활동은 서로 다른 정치 경향 그룹들한테서 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논점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쟁점으로 형성됐다. 우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뜻하는 “진보정당 세력의 통합” 자체가 첨예한 논쟁이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전국회의는 “마라톤이 아닌 백 미터 달리기 식으로”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울산혁신네트워크(준)와 ‘국민파’ 경향 현장조직으로 분류되는 혁신연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또 다른 ‘자주파’ 경향 현장조직인 현장등과 ‘평등파’ 경향의 노동전선 등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진보신당과 관련 있는 전진은 토론회에서 아예 통추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함께 몫 토론자로 참석한 나

정신에 공감하지만 두 당의 통합을 당장의 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심대한 감정적 양극을 남긴 분당이 불과 1년여 전에 있었고, 각 당이 각자의 정치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합을 강제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단결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급이 직면한 투쟁 과제를 놓고 공동전선 추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단결을 강화하는 현실적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서로 합의 가능한 투쟁 과제와 요구(행동강령 같은)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 민주적 권리 옹호 투쟁, 쌍용차 투쟁이나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투쟁, 울산북구처럼 선거 등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도 논란거리였다. 전국회의를 제외한 모든 의견그룹들이 이 방침을 철회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성 보수정당들에 맞서 진보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정신은 유지돼야 하지만 진보정당과 급진 정치세력들에 대해선 자유로운 지지 방침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여러 진보정당과 조직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세력에 대한 지지를 억지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단결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 이란 민중 항쟁

## 이란의 새로운 반란

이란계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페이만 자파리**는 이란 지배계급 내 심각한 분열이 공공연한 갈등으로 표출되자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말한다.

6월 12일 이란 대선 이후 폭풍이 1979년 혁명 이래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 왔다. 공식 선거 결과를 보면, 현 대통령 마무드 아바디네자드가 63퍼센트 지지를 얻었고 그의 주요 경쟁자인 개혁파 미르 호세인 무사비가 34퍼센트 지지를 얻었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 무사비는 정부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며칠 뒤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내가 던진 표는 어디로 갔는가?” 하고 외치며 시위 집합 경찰에 맞섰다.

이번 위기는 지배 엘리트 내 경쟁 분파들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 갈등의 효과는 선거를 넘어 이슬람 공화국 역사에서 일종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올해 선거 운동은 1979년 혁명 초기 이래 가장 큰 활력을 보여 줬다. 내 대선 후보 지지자들은 모두 거리에서 활기찬 선거 운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대학 내에 토론을 위한 “자유 구역”을 조직했다. 신문에 게재된 비판적 기사들은 인터넷이 곳곳에 퍼날라졌다. 최초로 후보들 간 토론이 국영 TV로 생중계됐다. 아바디네자드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부패한 전 대통령 아크바 하메디 라프산자니의 대리인들이라고 비교했다. 무사비는 아바디네자드가 경제를 망치고 빈곤을 심화시켰으며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아바디네자드가 이란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약속했다.

선거 운동이 달아오르며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정치적 공간이 열렸다. 젊은이 수천 명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약 4천만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 85퍼센트는 2005년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당시 1차 투표는 63퍼센트, 2차 투표는 48퍼센트였다). 무사비와 그의 선거 운동은 탄력을 받았고 거대한 “녹색”(무사비 진영의 상징 색깔) 운동이 거리와 인터넷에서 지지를 받으며 부상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 타브리즈에서 수백만 명이 무사비 지지 집회에 동참했다.

비록 아바디네자드 지지자들이 언론의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그들의 규모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2005년 대선에서 아바디네자드는 빈곤을 퇴치하고 “석유 판매 수익을 유권자들의 식탁 위에 올려놓겠다”고 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며 당선했다. 그 뒤 2년 동안 아바디네자드는 소도시·마을 3백50곳을 방문했고 국민들한테서 편지 9백만 통을 받았으며 현금 가 1천만 달러를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빈민 일부가 수혜를 입었지만 그밖의 대다수는 경기 위축으로 고통받았다. 당시 석유 판매 수익은 사상 최고였는데도 말이다. 아바디네자드가 집권할 당시 16퍼센트였던 물가인상률은 현재 약 25퍼센트다. 이란 중앙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도시 거주 가구 생활비는 지난 4년간 갑절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은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이다. 노동자 일인당 월급은 대략 2백23달러 정도인데, 이것은 빈곤선 한참 아래 수준이다. 실업률도 상승해서 공식적으로는 약 13퍼센트이지



제국주의자들은 이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외세 개입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란 사회를 바꾸려 한다.

이란 대선과 그 뒤 벌어진 사건들은 이란 지배 엘리트 내 분열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조만간 더 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란 점을 보여 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의 미래가 거리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지향의 정치 세력과 광범하게 연결돼 있는 무사비가 개혁파의 과제를 수행하기 에 안성맞춤으로 보였다. 무사비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첫 유세지로 노동계급 밀집지역인 테헤란시(市) 나지 아바드를 택했다. 주민들은 “미르 호세인은 우리의 영웅, 피억압자들의 지지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를 환대했다.

선거 기간 내내 무사비는 “빈곤 없는 미래”를 약속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란노동자통신사(ILNA)는 무사비가 54퍼센트의 지지로 당선할 것으로 예측했다. 응답자 가운데 전문직의 71퍼센트, 노동자의 69퍼센트, 학생의 62퍼센트가 무사비를 지지했다. 노동계급 표가 아바디네자드와 무사비로 갈릴 것이란 예측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 지배계급의 분열

이란 대선은 엘리트 정치인들 내 긴장을 경쟁 분파 간 노골적 정투로 발전시키는 촉매 구실을 했다. 경쟁 분파 간 긴장은 1980년대 이래 상충해 온 것이었다. 1980년대에 무사비는 지배계급 내 ‘좌파’를 대변하는 인물로 국가자본주의 경제와 빈곤층 보호 정책을 추진했다. 현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포함된 ‘우파’는 상인들(바자)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 의장 라프산자니는 둘 사이에서 약삭빠르게 천천히 ‘상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1980~1988년 이라크와 벌인 전쟁, 최고지도자 후를라 호메이니의 권위 때문에 이 분파들 간 경쟁은 봉합됐다. 1990년대 초, 자본가와 상인 들은 국가의 경제 개입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경쟁이 몰락하며 포퓰리스트들이 기층의 지지를 잃자 1989년 대통령에 당선한 라프산자니를 중심으로 체제 내 세로운 분파가 힘을 얻게 됐다.

“신우파” 또는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이 분파는 “전통적 우파”와 결탁해 지배계급 내 ‘좌파’를 권좌에서 밀어냈다. 가페드와 파스타치오(아이스크림이나 과자의 재료로 이용되는 과일) 무역을 거의 독점하며 부자가 된 라프산자니는 신흥

산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물가인상률이 50퍼센트에 이르고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1992년과 1995년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등 라프산자니의 경제 자유화는 역풍을 맞았다. 저소득층이 국가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간파한 하메네이는 “문화적 타락”을 비난하고 “이슬람적 가치”를 강요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부추길 뿐이었다. 이미 이란 사회 내부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고, 30세 이하 청년층이 총인구의 7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었으며, 종교의 구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었다.

1997년 ‘개혁파’ 모하마드 하타미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타미를 따르는 분파는 주로 중간계급 전문직, 지식인, 관료 들이었다. 하타미는 기층의 압력을 수용해 정치 개혁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을 키워 주는 지렛대 구실을 했다. 국가가 석유 판매로 얻는 이익을 나눠 이란 자본가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싶어 한 라프산자니는 무사비를 지지했다. 그러나 만일 하메네이에게서 이것을 보장받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사비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란 대선과 그 뒤 벌어진 사건들은 이란 지배 엘리트 내 분열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조만간 더 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란 점을 보여 줬다.



저항에 앞장선 이란 여성들

성직자들 사이에서 호메이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권위 때문에 고심하던 하메네이는 최고지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아바디네자드를 지지했다. 아바디네자드는 독자적 이해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 관료와 혁명수비대의 이익을 대변했다. 현재 이란 경제의 약 80퍼센트를 국가가 통제하고 약 1천5백여 개의 경제 프로젝트를 혁명수비대가 주관한다. 따라서 2005년 아바디네자드 정부 각료의 압도 다수가 이 계급 출신으로 채용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슬람공화국은 처음부터 의회·대통령 등 선출직과 최고지도자·혁명수비대 등 비선출직 사이에서 모순을 안고 태어났다. 최근 하메네이가 취한 태도는 둘 사이 힘의 균형을 비선출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시키려는 시도다. 그 래서 무사비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적어도 얼마간 거리 시위와 한 편에 섰던 용해 정치 개혁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을 키워 주는 지렛대 구실을 했다. 국가가 석유 판매로 얻는 이익을 나눠 이란 자본가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싶어 한 라프산자니는 무사비를 지지했다. 그러나 만일 하메네이에게서 이것을 보장받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사비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란 대선과 그 뒤 벌어진 사건들은 이란 지배 엘리트 내 분열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조만간 더 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란 점을 보여 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의 미래가 거리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선거 부정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내던져 거리로 뛰쳐나온 수백만 명과 그들을 지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가 의문을 제기하고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타브리즈, 마샤드, 바불, 라시트, 오루미에 등에서 표출된 대중 시위는 반쯤 자생적인 것이었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첫 집회가 열렸다. 무사비가 집회를 호소하자 6월 15일, 정부의 불허 조처에도 사람들이 1백만 명 넘게 모였다. 무사비는 측근에게서 수십만 명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접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면서도 노동계급은 라프산자니, 무사비 같은 자들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 뒤 며칠 동안 운동은 무사비에게 지도력 제공을 요구했지만 그는 오히려 운동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국가 폭력에 맞서 “탱크·총·바시지 민병대의 효력은 다했다”고 용감하게 외쳤다. 또 밤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 1979년 혁명의 슬로건인 “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투쟁을 계속했다.

〈인디펜던트〉의 중동 특파원 로버트 피스크는 말한다. “시위 참가자들이 선글라스를 쓴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 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여기엔 저소득층, 길거리 노동자, 차도르를 쓴 중년 여성 들도 참가하고 있다.” 다른 기자들과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도 피스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테헤란 대학에 다니는 사하르는 사람들이 “차도르를 썼든 안 썼든 다 같이 독재자를 타도하자!”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혹사와 환경미화원 들이 함께 행진했다. 〈스트리트〉라는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노동부 앞을 행진하며 “노동부엔 노동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이 운동은 몇 가지 민주적 요구들, 핵심으로는 공정한 자유 선거, 경찰사의 자유, 국가 탄압 중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급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묶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면서도 노동계급이 라프산자니, 무사비 같은 자들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중간계급 지도자들을 뛰어넘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이란 상황을 정치적

으로 이용하려 애쓰고 있다. 이스라엘의 극우 외무장관 아비그도르 리베르만은 이렇게 말했다. “아바디네자드가 재선하면, 국제 사회는 이란의 핵개발과 테러단체 지원을 막고 중동의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스라엘 외무차관 다니 아알론은 설사 무사비가 당선됐더라도 이란은 여전히 “위험적 존재”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서방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란 대중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를 조직하는 것뿐 아니라 자국 정부가 이란에 제국주의적 개입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반역 조영문 기자
출처: 영국 반제국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9년 7·8월 호
이란 대중 운동이 외세 개입이나 경제 제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싶어 한 라프산자니는 무사비를 지지했다. 그러나 만일 하메네이에게서 이것을 보장받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사비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란 대선과 그 뒤 벌어진 사건들은 이란 지배 엘리트 내 분열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조만간 더 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란 점을 보여 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의 미래가 거리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선거 부정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내던져 거리로 뛰쳐나온 수백만 명과 그들을 지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가 의문을 제기하고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타브리즈, 마샤드, 바불, 라시트, 오루미에 등에서 표출된 대중 시위는 반쯤 자생적인 것이었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첫 집회가 열렸다. 무사비가 집회를 호소하자 6월 15일, 정부의 불허 조처에도 사람들이 1백만 명 넘게 모였다. 무사비는 측근에게서 수십만 명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접

임지훈 동지의 ‘이란 사태, 누구의 이익인가’에 대한 반론

## 이란 민중 항쟁을 지지하는 것이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이롭다

이란 민중 항쟁에 대한 임지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의 글을 잘 읽었다.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임지훈 동지가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신문에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힌 개입주의 정신과 설득의 자세로 논지를 전개한 당당한 인상적이다.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와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진영”에 맞선 투쟁을 중요시하는 것은 나와 중요한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임지훈 동지의 주장은 결정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저항의 지도 이데올로기 문제다.

임지훈 동지는 “아바디네자드 정부가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사비 측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자유시장과 신자유주의”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기 때문에 시위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사비의 정치적 약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임지훈 동지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바르다. 그러나 투쟁을 분석할 때 그 지도 이데올로기가 지도적인 세력의 지향을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그 투쟁의 객관적 성격과 효과를 봐야 한다.

전자만을 우선시하거나 투쟁 성격 분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 복잡다단한 계급투쟁의 양상에 올바로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한 예로, 1980년 5월 광주항쟁의 지도 이데올로기는 김대중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였다. 게다가 유명한 일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불안정에 대처하고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부산으로 보냈을 때, 광주항쟁 참가자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들을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반제국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데올로기가 저항 운동에 지배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항쟁을 친자본주의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시위로 폄하해야 하는가. 그렇기는커녕 광주항쟁은 1980년대 내내 저항의 뿌리 구실을 했고, 한 세대를 급진화시켜 모종의 혁명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정치가 등장하게 만들 마르티지 않는 세물이었다.

둘째, 임지훈 동지는 “시위의 주요 세력인” 이란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인터넷의 첨단기기 활용능력이 크다”는 것을 “서구 지향성”의 문제가 있는 사례로 든다. 그러나 임지훈 동지가 든 사례는 오늘날 국제적 저항 운동의 양상을 볼 때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시위의 성격을 폄하하기 위한 꼬투리 잡기식 비판으로 들린다.

한국에서 지난해 촛불시위 때 인터넷은 보조수단 구실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열의 있는 촛불 시위 지지자들은 외신의 촛불 시위 보도들과 정부의 영합의문들을 번역해 인터넷에 올렸

다. 그러던 이런 사례를 들어 촛불시위를 친서방 시위로 매도해야 하나? 이란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다. 임지훈 동지가 마치 특권층처럼 취급하는 대학생 수가 무려 3백50만 명이 다(전체 인구는 약 7천만 명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89.4퍼센트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란은 베일도 거의 전제까지 미국 정부 공작이 신화로 부풀려져 있고, 오히려 실수와 오류 투성

이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7년 기준으로



시민들이 미국의 도움을 버렸다고 해서 광주항쟁의 의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로 세계 13위다.(한국은 8위다.)

셋째, 임지훈 동지는 미국과 서방의 시위 개입을 지적한다. 미국과 서방이 발 빠르게 이란 정부를 타압을 중단하라고 발표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근거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의 우선 때문에 이란 민중의 시위를 부산으로 보냈을 때, 광주항쟁 참가자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들을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반제국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데올로기가 저항 운동에 지배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항쟁을 친자본주의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시위로 폄하해야 하는가. 그렇기는커녕 광주항쟁은 1980년대 내내 저항의 뿌리 구실을 했고, 한 세대를 급진화시켜 모종의 혁명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정치가 등장하게 만들 마르티지 않는 세물이었다.

2006년에 공개된 박정희 시절의 외교 문서를 보면, 당시 미국 정부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 너무 강경한 조치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중앙정보부가 지행한 김대중 납치·피살 시도에 대해 “김대중이 생존해 있어 다형스럽고 미국이 오기 원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그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임지훈 동지의 분석 방법에 따르면 긴급조치 9호에 항의하는 운동과 박정희 정부에게 압박받던 김대중 구명운동 또한 미국의 개입에 의한 것이 된다.

임지훈 동지는 더 나아가 시위에 미국이 실제로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중요한 전략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과 배후조종을 강조하는 주장은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가진다.

첫째,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가 깔려 있지만,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무소불위의 힘’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음모와 배후조종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음모와 배후조종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음모와 배후조종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음모와 배후조종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아바디네자드를 비롯한 이란 지배계급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이란 정부는 중동의 중요한 저항세력인 헤즈볼라와도 연관이 있지만, 제

람렘하우스, 2008)

둘째, 이런 주장은 해당 국가 내의 계급투쟁과 정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음모’로만 현상을 분석한다.

“배후조종”과 같은 음모론의 약점은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의도치 않게 음모를 꾸미는 대상의 “정치전능함”을 강조함으로써 저항과 변화의 열망에 무력감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란을 휩쓸었던 저항의 배경은 “민중의 불만 가득한 현실”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이란을 방어할 때 이란 지배계급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오히려 방어를 건설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다만

둘째,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가 깔려 있지만,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무소불위의 힘’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음모와 배후조종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음모와 배후조종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음모와 배후조종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럼기 때문에 아바디네자드와 이란 지배계급들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면서 도, 그 총구를 이란 지배계급에 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 그래서 이란에서 진정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 그래서 중동 지역의 연속 혁명의 가능성을 실질화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제국주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디네자드와 이란 지배계급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피억압자 들의 저항과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란의 민주주의 시위와 저항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계급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도 이란 지배계급에 맞선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이란의 저항과 시위를 폄하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옹호자” 행세를 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위선을 묵인하는 것일 뿐이다.



# 중국은 왜 소수민족을 억압하는가?

7월 5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위구르인 수천 명이 광둥성 공장에서 위구르 노동자 2명이 집단 구타당해 숨진 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평화롭게 행진한 것이었다. 목격자들은 중국 경찰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심지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위구르인의 분노가 폭발했고 한족 이주민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1백84여 명이 죽었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한족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해 티베트 항쟁에서 희생된 티베트인 수를 대폭 축소 발표한 전례를 볼 때, 이를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다. 중국 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이 요구한 객관적 조사를 거부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1천5백 명 이상을 다치는 대로 잡아들였고, 세계위구르위원회와 '알카에다와 연결된 무슬림 테러리스트' 등 외부세력이 개입해 평화로운 신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신장에서는 1954년부터 거의 60년간 중국 정부 통치에 반대하는 행동이 반복돼 왔다. 대규모 카자흐 난민 사태로 연결된 1962년 일리 항쟁, 1969년 말동투르키스탄 민중혁명당의 활동, 1천 명이상이 다친 1980년 악수 지역 소요 사태, 1985년 베이징 중앙민족대학 위구르 학생들의 시위 등등, 1990년대 들어서는 5만 명 넘게 참가한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1995년 4월에는 노동자·교사·상인 10만 명이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위구르족이 행동의 중심에 있었지만 카자흐족 등 이 지역의 다른 소수민족들도 중국의 통치에 항의했다.

## 문제의 시작, 1949년 중공군의 점령

오늘날 중국 관련 역사가들의 주장과 달리, 역대 한족 왕조들은 신장 지역을 국가의 일부로 통제한 적이 없다. 만주족이 세운 청왕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신장의 일부를 정복하고 통치하려 했다. 이 시도는 1911년 청조가 몰락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위구르족 지식인들이 주도에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을 세웠지만 군벌과 국민당, 스탈린 치하 소련의 방해로 오래가지 못했다.

1949년 중공군이 신장 지역으로 진격하자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은 중공군을 국민당과 군벌의 잔학한 통치를 끝내 줄 해방자로 환영했다. 1950년대 초 토지개혁은 소수민족 농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홍군이 영구적 점령을 위해 이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드러나자 실망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신장 지역은 1950년대 말 농업 강제집산화와 대약진 운동, 1960년대 문화대혁명이 가져온 혼란과 이슬람 사원 파괴 등 중국 정부의 재앙적 경제 정책과 중앙의 유혈난자한 파벌 싸움에까지 휘말리게 됐다. 중국 정부가 한족을 대규모로 이주시키면서, 1949년 위구르 인구의 5퍼센트에 그쳤던 한족 비율은 1970년대 초반에는 거의 40퍼센트로 늘었다.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은 한족 이주민에 비해 언어, 교육, 종교 활동, 고용 등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차별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집단 행동은 탄압을 받았다. 신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전형적인 식민지였고, 중국 정부는 제국주의 점령군이었다.



위구르인들을 탄압하려고 우루무치시(市)에 투입된 중국 경찰들

1949년 중국공산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를 성공시켰다. 그러나 이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제3세계 민족해방 혁명이었다. 이것은 1920년대 스탈린의 재앙적 지령으로 중국 노동자 혁명이 패배를 겪으면서 중국공산당이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와 단결을 추구하던 정당에서 민족주의 정당으로 변신했기 때문이었다. 초기 중국공산당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정부의 정책을 본따 소수민족들에게 민족 자결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1949년 마오쩌둥의 소수민족 정책은 자결권을 부정하는 중국의 다른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치인들과 비슷했다. 중국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서방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발하는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공극적 대안은 강력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열강을 증오했지만, 제국주의를 극복하려면 제국주의를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중국에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안보를 보장받으려면 "명청하고 미개한" 변혁의 소수민족들이 제국주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개몽된" 한족들을 소수민족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중앙정부

가 정치·군사·경제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난 5천 년 동안 한족 국가들이 형성돼 중국이 이 지역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생기고, 중앙아시아와 신장을 연결하는 송유관 사업이 진행되고 대규모 유전이 개발되는 등 1990년대 이후 중국 지배자들에게 신장 지역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그리고 중국 지배자들의 우월한 군사력을 고려할 때 신장 위구르족이 민족자결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티베트 등 억압받는 다른 소수민족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신장 위구르족과 다른 중국 내 소수민족의 운동은 지금 중국 지배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한족 노동자·민중 투쟁과 결합돼야 승리할 수 있다. 이 투쟁은 아직 파편적이지만 횡수와 규모는 매우 크다. 이른바 '집단 행동'이 2008년에 18만 건, 2009년 상반기에만 6만 건 부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중국 정부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신장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일부였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원송이가 인간으로 진화하기 전인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 변혁의 소수민족들이 제국주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개몽된" 한족들을 소수민족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중앙정부

가 정치·군사·경제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난 5천 년 동안 한족 국가들이 형성돼 중국이 이 지역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생기고, 중앙아시아와 신장을 연결하는 송유관 사업이 진행되고 대규모 유전이 개발되는 등 1990년대 이후 중국 지배자들에게 신장 지역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그리고 중국 지배자들의 우월한 군사력을 고려할 때 신장 위구르족이 민족자결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티베트 등 억압받는 다른 소수민족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신장 위구르족과 다른 중국 내 소수민족의 운동은 지금 중국 지배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한족 노동자·민중 투쟁과 결합돼야 승리할 수 있다. 이 투쟁은 아직 파편적이지만 횡수와 규모는 매우 크다. 이른바 '집단 행동'이 2008년에 18만 건, 2009년 상반기에만 6만 건 부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중국 정부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신장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일부였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원송이가 인간으로 진화하기 전인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 변혁의 소수민족들이 제국주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개몽된" 한족들을 소수민족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중앙정부

로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장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총알받이가 되고 전비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한족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이다. 또, 민족주의를 통해 계급 체제의 모순을 감춤으로써 저임금과 관료의 부패로 고통받는 것도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이다.

1989년 톈안먼 항쟁은 한족 노동자 민중 항쟁과 소수민족 투쟁이 결합될 가능성을 언뜻 보여 줬다. 1989년 5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을 때 신장에서도 위구르족 대학생들이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곧 신장 지역의 민주화, 즉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당시 톈안먼 광장에서는 위구르족인 우어카이가 광장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기도 했다.

비록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톈안먼 항쟁이 좌절됐지만, 최소한 한족 노동자·민중과 소수민족이 공동의 적에 맞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오늘날 한족 노동자·민중 투쟁이 다시 한번 1920년대나 1989년 같은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하고 중국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의 길이 열린다면, 신장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민중이 한족 민족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중화 제국주의'의 부상은

## 민족주의를 이용한 분열지배

영국 사회주의자 사이먼 바스케터는 민족 억압, 인종차별주의와 종족 갈등이 국민국가와 식민주의의 유산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이 낳은 투쟁들이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 보여 준다.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한 빈민 집단이 다른 빈민 집단을 공격하는 충격적 장면은 민족·종족 갈등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것이 있다는 인상을 강화했다. 흔히 언론은 그런 갈등을 북아일랜드, 르완다, 옛 유고슬라비아, 오늘날 중국 등 전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하는 어두운 민족적·원초적 증오가 표현된 것으로 묘사한다. 민족 간 또는 민족 내 갈등은 초역사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현대 국민국가의 탄생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자본주의 등장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국민국가들은 16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이래 어디까지가 자기 영토고 누구까지가 자기 국민인가를 둘러싸고 투쟁을 벌였다.

신흥 자본가 계급은 자신을 새로운 국민국가의 지배자로 여겼고,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18세기 프랑스에서 봉건제 질서를 무너뜨린 혁명가들은 민족, 시민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교한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에는 모순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국가가 사회를 조직하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집단들은 열강의 방해로 독자적 국가를 건설할 수 없었다. 보통 이 집단들은 그 사회의 주류 권력에 편입됐다. 강력한 국가가 민족, 종족, 종교적 차이를 이용해 대중을 분리통치하는 시도는 제국 건설만큼이나 오래된 통치 전술이다.

오늘날 종족 간 충돌이나 민족 간 갈등으로 혼역을 알고 있는 나라들이 과거 공통적으로 제국주의 지배를 겪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도에서 영국은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를 의도적으로 이간질해, 성장하는 반식민지 운동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런 정책이 끔찍한 종파 간 충돌을 낳자, 영국은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했다.

단지 제국들만 그런 정책을 펼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계급도 국내용으로 그런 정책을 사용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지면, 정부는 언제나 특정 집단을 축적양으로 만들려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는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를 더 약한 집단에 대한 분노로 전환시키려 했다.

19세기 유럽 제국들의 성장으로 현대 민족주의가 더한층 발전했다. 영국 지배자들은 아등에게 '영국 역사의 찬란한 유산'을 가르치는 국가 교육 제도를 통해 '위대한 개신교' 민족을 찬양하는 새로운 운동을 개시했다. 영국 중간계급은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할 물질적 이유가 있었다. 영국의 해외 제국을 운영한 관리들은 영어 사용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주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종원됐다.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 심지어는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도 제국의 판교가 되기는 힘들었다.

영국 지배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일랜드 이주민에 적개심을 품은 영국의 민족 우월주의를 고취하면 민족 간 분열로 노동계급이 효과적인 투쟁을 벌이기 힘들게 되는 이점도 있었다.



제국주의의 민족 분열지배가 낳은 참상 -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 분열 과정에서 힌두교와 무슬림 간 대학살이 벌어져 약 1백만 명이 죽었다.

19세기 말에 위대한 혁명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영국 언론들이 아일랜드 이주노동자들을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들이 아일랜드 노동자들에 우월감을 느끼고,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영국 노동자들이 매수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 영국 지배자들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우리 지배자들은 단지 억압받는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억누르기 위해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지배자들의 차별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노동자들은 막상 별로 얻은 게 없었다.

20세기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체제에서 산 가난한 백인들은 그 체제에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지배자들의 편을 매우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말이다.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노동자들은 그 자신도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카톨릭 노동자들을 깔보았다. 개신교 노동자들은 '카톨릭 적대'에 비해 자신이 특권을 누린다고 착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억압적인 제국조차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에를 먹었다.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종종 민족우월주의적·인종차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게 된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진정한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이 차별을 지지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면에, 억압에 맞선 전 세계적 운동에 연대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억압이 폭발적 투쟁을 낳을 수 있지만, 그 투쟁 자체가 분열적이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억압 국가에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운동에 개입해 다른 노동자 집단을 억압받는 사람들의 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의무가 있다. 민족해방 운동은 그것의 성공이 노동

계급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국주의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인도 독립 운동, 미국 정령에 반대한 베트남 투쟁과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저항은 좌파가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민족해방 운동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 투쟁들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며, 그들의 승리는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민족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소규모 국가로 분리독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 민족독립 운동은 때때로 경쟁 제국주의 열강들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주의와 연합한 폴란드 민족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1990년대 코소보 지도자들이 세르비아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동맹한 것도 마찬가지지 사례다.

민족주의에서 또 다른 문제는 해방 운동을 약화시키려고 언어와 종교의 차이를 고의로 이용하는 반동적 민족주의가 종종 등장한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오텔지당(개신교 우익 테러·정치 단체)은 1790년대 아일랜드 민족해방 운동을 파괴하려고 개신교 우월리·고등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다.

그러나 자기 국가를 통치하려는 꿈을 성취하려면 중간계급은 빈민을 포함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진정한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이 차별을 지지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면에, 억압에 맞선 전 세계적 운동에 연대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억압이 폭발적 투쟁을 낳을 수 있지만, 그 투쟁 자체가 분열적이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억압 국가에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운동에 개입해 다른 노동자 집단을 억압받는 사람들의 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의무가 있다. 민족해방 운동은 그것의 성공이 노동



## 쌍용차 공기업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야 하는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을 넘어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량 해고와 경찰력 투입이 아니라 쌍용차 공기업화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쌍용차 법대위 등도 해고가 아니라 공기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는 분명 옳다. 하지만 공기업화 요구에 앞서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라는 표현으로 말이다.

지난 호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의 글 제목도 “경찰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라”였다. <레프트21>의 전지윤 기자도 6호에서 “공적자금은 이럴 때 써야” 한다며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보장하고 쌍용차를 국유화”하라고 했다.

물론 재벌,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4백5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쌍용차 회생을 위해 필요한 자금 8천8백억 원을 못 내놓는다는 것은 분명 위산이다.

그러나 첫째, 공적자금 투입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처다.

올해 미국에서는 AIG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5백억 달러가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같은 세계 유수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보전하는 데 지급돼 논란이 됐다.

남한에서도 지난 IMF 경제 위기 때 대기업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부채를 갚고 금융비용을 낮췄고, 투자 수준 조정과 정리 해고를 통해 착취율을 높이는 등 수익성을 개선했다. 1997년 만도기계 부도 이후 김대중 정부는 무려 3조 6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기업은 살렸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은 해고됐다.

비슷한 시기,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오리온전기는 흑자 도산 후 노동자의 70퍼센트가 해고되고 8년 동안이나 임금을 동결하며 1조 2천억 원에 이르

는 공적자금 지원으로 겨우 회생했지만, 2006년 결국 노무현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기업을 아예 ‘투기자본’에 매각해 버렸다.

대우종합기계(전 대우중공업)는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워크아웃을 통해 공적자금을 받았다. 이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려야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생각 때문에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노동 강도 강화 등을 감수했지만 전체 인력의 35퍼센트인 2천4백여 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대우종합기계가 부채비율을 4백52퍼센트나 낮추고 되살아난 것은 이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 때문이다.

### 공적자금과 산업은행

둘째, 산업은행이 쌍용차의 대주주가 돼도 공기업화와는 거리가 멀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 요구는 산업은행이 채권을 출자전환해서 대주주가 돼 쌍용차의 운영을 맡으라는 뜻이다(안재원 연구원,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블로그, 6월 29일치). 산업은행은 정부 소유이므로 산업은행이 쌍용차의 대주주 지분을 가지면 쌍용차는 공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은행은 도산하는 기업들의 대출 채무를 주식으로 바꿔 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다가 이후 그 기업들을 매각했다. 지금도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를 매각하려고 한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쌍용차의 대주주가 되고 상하이 자본의 지분을 소각하더라도 쌍용차가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후에도 구조조정해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적자금 투입은 망해가는 기업을 팔아치울 수 있을 정도로 구조조정해 매각하려는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도산하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주장은 대중적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

공적자금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의 혈세로 채워진다. 1997년 이래 무려 1백69조 원의 공적자금 덕에 기업들은 더 부유해졌지만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더 가난해졌다.

김대중 정부만 해도 임기 5년을 마무리하면서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으로 인해 국민 1인당 2백만 원 가까이 부담하라는 청구서를 던져준 셈이었다.

대우 파산으로 무려 30조 원(국민 1인당 6만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붓게 한 김우중은 영국금융센터(BFC)라는 대우의 런던 법인 비밀계좌를 통해 25조 원을 빼돌려 서민들의 분노를 샀다.

12조 원의 가치가 있던 대우차는 1조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GM에 팔려 18조 원의 부채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 그런데도 GM은 법인세·취득세·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따라서 쌍용차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여론이 70퍼센트를 넘는 만큼,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쌍용차를 정부가 책임져 즉각 공기업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레프트21> 9호의 온라인 기사에서 조너선 날이 주장한 것처럼(‘GM을 살리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유’) 자동차 공장은 SUV 자동차를 생산하던 기술로 풍력 발전기, 태양 전지판, 하이브리드 버스를 만들 수 있다. 또 케빈 디바인의 주장처럼(‘악마의 회전목마’) 자동차 노동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버스, 전차, 기차, 구급차도 만들 수 있다.

쌍용차를 친환경적 대중교통 수단을 만드는 공기업으로 만들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이윤이 아니라 대중의 일자리와 삶을 지킬 수 있다.

은진

## ‘악마’와 연대할지라도 ‘영혼’은 팔지 말아야 한다

지난 호 독자편지 ‘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연대할 줄 알아야’에 공감과 이견이 있어 적는다.

진보 진영이 원하는 변혁은 단순히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쟁취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타 정치세력과 언제,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대의 철학과 원칙’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아무것이나 연대의 ‘철학과 원칙’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역사적인 투쟁 경험들의 성공과 패배를 분석해 일반화한 이론에 기반을 뒀아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revolution은 MB를 거꾸러뜨리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연대의 당위성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지속적인 ‘민주전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의 개혁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심지어 선거전술로서도 낙제점이다.(민주당이 할 수 있는 주장만 패는 민노당, 진보신당을 뒤흔들러 민중이 찍어주겠다. 더 크고 더 유명한 민주당을 찍지.)

더 안 좋게는 진보 진영이 제 목소리 내기를 포기함으로써 대중에게 대안을 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대중은 이미 민주당의 말뿐인 개혁과 한나라당과 거의 다를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때문에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

반MB 또는 반한나라당 전선을 위해 진보 진영이 민주당을 붙잡고자 자신의 주장 패기를 주저한다면 그 결과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했던 중도 좌파와 연정을 했던 이탈리아 재건 공산당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재앙

이 될 것이다. 결국 대중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감만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반MB 전선에 일관되게 동참하리라 보기도 어렵다.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그들의 발언도 그렇거니와 지금의 반MB 정서를 만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도 민주당의 책임은 가뱌지 않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은 민주당 스스로 한나라당의 2중대라고 불려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 만큼 우파적이다. 지금은 노무현의 죽음을 기회삼아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행보를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MB의 정책들에 반대할지는 회의적이다.

권력의 침몰은 전 사회적 변혁을 촉발시키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초래할 것이며 반드시 진보 진영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옳고, 이를 위해 악마와도 굳건히 손잡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도 옳다. 그러나 악마와 연대하더라도 ‘영혼’을 팔아선 안 된다.

민주당과의 ‘조건없는’ 연대는 그야말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고, 목적을 잊고 수단에만 경도되는 것이다. 대중의 신뢰를 잃을 것이 분명한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변혁이 아니라 사소한 개혁조차 불가능하다.

트로츠키는 공통의 적에 대항해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손발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MB에 맞서 사안별로 민주당과 연대를 하더라도, 그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같은 우파적 행태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병현

## 이란 논쟁 사진 편집은 적절치 못했습니다

평소 <레프트21>의 논쟁기사를 즐겨 보는 나로선 9호의 ‘이란 민중 항쟁에 대한 태도 논쟁’은 이란 시위에 대한 논쟁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앞으로도 <레프트21>에서 다양한 운동 내 논쟁을 보고 싶다.

그런데 기사의 사진 편집은 적절하지 못했다. 거대한 테헤란의 시위물결 사진이나 바시지 민병대의 시위대 폭행 사진은 임지훈 씨의 논조와 반대되는 사진이다. 신문 사진은 글의 논조를 한눈에 보여 주는 장치이므로 편집인이 의도했던 아니건 결과적으로 <레프트21>이 임지훈 씨 본인은 물론 앞으로 이 신문과 논쟁하려는 독자들에게 개방적이지 못한 신문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임지훈 씨의 글에 등장하는 서구적 옷차림의 대학생 시위대 사진이나,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사진 등을 함께 싣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분명히 <레프트21>은 정치적 ‘중립’을 찬양하는 부르주아 신문 — 오히려 그들이아팔로 진정 중립적이지 않다 — 이 아니다. 하지만 좌파 내에서 우호적이고 개방적으로 논쟁하기 위해서는 <레프트21>의 좀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석진

## 김종환 독자에 대한 답변: 화물연대 파업은 무엇을 얻었나

김종환 씨의 지난호 독자편지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를 잘 읽었다. 김종환 씨의 고마운 지적처럼 ‘분석’에 기초해 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레프트21>의 변함없는 숙제다.

점거 파업 계획이 확정돼 파업 시점만 남아 있고 다수 취재원이 있던 쌍용차와 달리 화물연대는 정권의 혹독한 탄압과 전국에 산개한 조건 등으로 구체적 분석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레프트21>은 화물연대 파업에 명확한 전술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다. <레프트21>은 물류 봉쇄 방식의 파업이 효과적이라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이명박이 조문 정국의 해일에 허우적거린 6월 초순이 파업의 적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파업을 방어하는 기사 역시 <레프트21> 독자들에게 무기와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화물연대 파업 평가 기사에서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열사의 한을 푼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제목이 파



전지윤 기자

업 성과를 과장해 표현했다는 점이다.

물론, 화물연대 파업의 종합 대차대조표는 이 파업이 승리했다고 말해 준다. 보수 언론의 자기 기만과 달리, 대한통운이 화물연대를 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했기에 고(故) 박종태 열사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쟁취하고 해고 조합원이 해고 기간 임금까지 받으면서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여러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편집자가 ‘완전

승리’를 떠오르게 하는 제목을 단 것은 유감이다.

한편, 김종환 씨가 화물연대 지도부가 쟁점과 투쟁 대상을 더 확대하지 않은 점을 아쉽다고 지적한 것은 대체로 공감한다.

올해 열사 투쟁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권의 탄압과 기업주들의 보복에 맞서 싸운 명백히 ‘방어적’ 투쟁이었다. ‘투쟁하는 민주노조로서 화물연대’를 조직으로 유지하고 실체를 인정받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의도와 관계 없이 이 투쟁이 정치투쟁 성격을 띠어왔다.

따라서 열사대체위가 5월 6일 결성되면서 투쟁 목표를 대한통운으로 한정하는 것은 화물연대 스스로 투쟁의 폭과 전술 기동의 여지를 좁혀 버린 것이다. 또한 예정된 5·30대회와 6·10대회에 대대적으로 참가해 스스로 정치적 초점이 돼 지지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이는 경기 악화로 파업 효과가 반감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퇴각 전술”이 필요했다

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밀려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는데 ‘퇴각 전술’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파업 직전 사측 양보안보다 더 얻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6월 14일 밤 고속도로를 봉쇄하려던 5백여 대의 차량이 그냥 돌아온 것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다. 오히려 서울 집결 집회를 통해 후속 투쟁을 결의하며 마무리했다면 어떠했을까 싶다.

그러나 ‘방어적’ 투쟁이었기에 방어를 잘 했느냐가 평가의 일차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파업은 김종환 씨 표현처럼 “옳은 결단”이었다.

우선, 경기 악화와 단일 사업장 쟁점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들이 화물연대에 공포를 느낀 것은 “파업” 때문이었다. 또 과감한 파업 돌입 덕분에 정부 역시 당분간 화물연대 외해 시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파업 종료 후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김문성 객원기자



## 이정구 교수님의 폴라니 비판에 이견이 있습니다

폴라니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레프트21> 8호에 실린 이 교수의 글은 반가우면서도 불만족스럽다.

첫째, 이 교수는 폴라니가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세계 각 폴라니 연구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독창적인 주장이다. 폴라니 이론을 경제사학의 독특한 방법론이나 케인스주의의 한 형태로 계승하려는 온건한 연구자들도 폴라니가 사회주의자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 교수가 글의 중간부에서 폴라니가 “뉴딜 정책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억제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재촉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즉, 폴라니는 출발점은 뉴딜일지라도 종착점은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분명히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민주적 사회에 종속시킴으로써 자기조절적 시장을 극복하려는 산업 문명에 내재한 경향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을 직접 통제해야 하며, 시장이 자유사회에 종속된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산업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하다.”(<거대한 변환>, 2001년 영어판 242쪽)

이것은 폴라니가 영향받은 이론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폴라니는 오스트리아 망명 시절 오토 바우어의 ‘기능적 사회주의’ 이론과 오스트리아 사민당 정부의 ‘지방자치 사회주의’ 정책의 성과에 크게 감명받았다. 영국 이주 후에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로버트 오웬의 길드 사회주의를 흡수했다. 이들을 종합해 폴라니는 생산자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민주적 사회주의 경제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마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만이 진정한 사회주의이고 나머지는 가

짜라고 보는 것 같은데, 마르크스조차 폴라니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로버트 오웬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렀다. 어쨌든 사회주의자로 인정한 것이었다.

폴라니의 사회주의론이 실현가능한지, 약점은 없는지 등은 논란거리다. 이 교수가 그토록 강조한 지역주의적 대안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이 교수처럼 폴라니의 대안을 지역주의로 환원할 수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지역주의적 대안 추구는 언제나 실패했다”며 마치 폴라니가 자본주의 체제 내 지역주의를 주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 민주적 사회주의

물론 폴라니는 대안 문제에서 매우 난잡한 주장을 했다. 그는 로버트 오웬, 오토 바우어, 스탈린, 프랭클린 루즈벨트, 민주적 사회주의처럼 이질적인 종류의 정치가나 정치에 대해 한번 이상 호의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혼란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폴라니에 영향을 받은 경제사학자 프레드 블록(Fred Block)은 폴라니가 <거대한 변환>을 쓴 10년간의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뒤, 스탈린을 포함해 현실 정치인이나 국가에 대한 폴라니의 지지는 적극적 지지라기보다는 차악에 대한 지지였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폴라니의 대표작 <거대한 변환>과 다른 주요 논문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폴라니가 스탈린 같은 독재적 계획체제가 아니라 민주적 계획경제를 더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겼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폴라니에 영향받은 사람들 중 태반은 폴라니의 사회주의 사상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석훈 교수는 폴라니를 NGO류의 제3섹터 이론을

주장한 사람으로 해석한다.

다행히 급진 비교 경제학자 팻 데바인(Pat Devine)은 다양한 글들에 흠어져 있는 폴라니의 사회주의론을 꼼꼼히 분석하고 활용해 대단히 독창적인 민주적 계획경제의 상을 그렸다. 데바인은 시장과 시장사회를 구분해 시장사회는 폐지하지만 민주적 계획의 틀 내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자는 폴라니의 주장을 발전시켰다. 또, 관료 지식이 아니라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내생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폴라니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 교수처럼 왜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교조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데바인처럼 폴라니가 민주적 계획경제를 연구한 사회주의자란 점을 인정하고 폴라니의 가능성을 더 발전시키는 방식이 유익하지 않을까?

둘째, 이 교수가 결론 부분에서 “자기조정적 시장경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구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한 것은 폴라니에 대한 반박이 되지 못한다. 폴라니는 시장경제를 국가가 법 등의 제도를 이용해 뒷받침한다고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 자신도 글 도입부에서 “폴라니는 ... 시장경제가 주된 경제제도로 자리잡은 것은 [중상주의] 국가의 의도적인 정책 덕분이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노동, 화폐, 토지를 상품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나 경찰, 군대를 동원해 이를 관철시키려 했고 폴라니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폴라니가 제도적 뒷받침을 알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가?

셋째, 이 교수는 이어서 “폴라니가 말한 사회에서 탈착근(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거대한 변환(사회

의 안정성 회복)의 논리는 너무 기계적이고 단선적이다”고 비판한다.

일단 내가 머리가 나쁘고 과묵한 탓인지 아무리 반복해 읽어도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뒷 문장은 말 자체는 옳다. 그러나 폴라니 자신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폴라니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없다.

폴라니는 때때로 낙관론을 펴기도 했지만, 세계혁명의 확산을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덜 낙관적이었고, 사회가 자동적으로 안정을 회복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다. 폴라니는 이중운동에서 자유방임 시장을 향한 운동은 국가의 개입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지만 그에 맞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운동은 조직적이지 않고 산발적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자유방임은 계획적이지만, 계획[을 향한 움직임-역재]은 그렇지 않다.”(<거대한 변환>, 2001년 영문판, 147쪽)

오히려 폴라니는 자본주의 틀 내에서 시장에 개입해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시장경제의 작동을 교란시키면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시장에 맞선] 반대 운동이 사회 보호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자기조절, 궁극적으로는 시장체제 그 자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거대한 변환>, 2001년 영문판, 136쪽) 폴라니는 대공황의 발생 원인으로 자유방임 경제와 그에 맞선 어설픈 반대 움직임이 충돌한 것을 말한다. 폴라니는 사회가 시장경제를 몰라치고 안정성을 회복할거라는 “너무 기계적이고 단선적” 주장을 하지 않고 대신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뛰어넘은 민주적 사회주의만이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Zizeker

### ‘강남춧불’의 쌍용차 파업 지지

## “부디 다치지도 지치지도 마십시오”

2008년 춧불집회 이후 1년 넘게 춧불을 들고 있는 ‘강남춧불’ 카페는 회원들의 투표로 7월 5일 팽택 쌍용차 지지 방문을 결정했다.

먼저, 투표로 결정된 “부디, 다치지 마십시오. 부디, 지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드렸고 ‘강남춧불이 쌍용차 노동자분들을 대.농.고.지.지.합니다!!!’라는 현수막과 컵라면 1백여 개도 보내 드렸다. 방문할 때엔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를 사 들고 갔다.

팽택 공장에 도착하자 공장 초입부터 검문·검색을 했고, 정문 입구를 막아서 가족들조차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행벌에서 노조원과 가족들은 공장 울타리와 경찰이 봉쇄한 입구에서 아이를 넘겨 안는 안타까운 상봉을 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울컥했다.

### 사측 비호하는 정부

경찰이 헬기를 띄워 조합원들을 위협하는 광경은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정부는 중립이 아니라 사측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전쟁 시에도 아프고 죽어 가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인데도 경찰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의료약품을 전달하려려 방문하자 법원에 가서 출입허가증을 받아오라며 막아섰다.

우리 회원들은 정문을 사이에 두고 악수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쌍용차 점거 파업은 정당하다! 공적자금 투입하여 쌍용차 살려내라!’ 하는 짧은 구호를 외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일자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평생 일한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뺏은 것은 노동자들에게선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9백76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정부가 부실한 뺑뚱기 상하이에 쌍용차를 매각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지지방문을 통해 더 절실해졌다.

쌍용차 노동자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 주시고 힘내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디, 다치지 마십시오. 부디, 지치지 마십시오.

수우 강남춧불 회원

##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깨달은 점

노동부는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 공급을 확대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나는 바로 그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업과 노동부가 나의 월급을 공동부담한다. 그 조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들보다 양심적이고 비교적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취지대로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정급여와 4대보험 등을 제공하려면 그만큼의 수익을 내야 한다.

최소한 일자리를 유지할 정도의 수익성을 창출하려면 서비스 비용(혹은 생산품의 판매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의 의도와 달리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된다. 가령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 노인부부에게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도 쉽게 낼 수 없는 거금이다. 7월 13일자 <경향신문>에 소개된 한 장에 10만 원짜리 “정당한” 블라우스는 세전 소득 월 1백50만 원인 나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싼 값에 충분히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지현

## KBS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

최근 KBS는 비정규직 ‘보호’ 법에 따라 직접 계약돼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에게 해고 대신 파견회사로 가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재계약하라고 강요하며 이에 불응한 비정규직들을 해고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KBS는 자회사 ‘KBS 미디어텍(가칭)’ 설립에 본격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사 연봉계약식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 안전을 확보해 준다는 사랑발림말을 늘어놓으며 말이다. 그러나 KBS가 만들고자 하는 이 자회사는 실제 무경을 열어보면 하청업체에 불과해 고용은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KBS는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뜨거운 맛을 보자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투쟁을 원천봉쇄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끈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심산이다.

방송국의 시스템에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방송국의 정규직 채용정보를 보면 PD, 아나운서, 기자, 기술 등 다섯손가락을 넘지 않을 만큼의 극소수 분야만을 채용하고 있다.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분야들도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방송국은 왜 노련하고 안정적으로



사진: KBS 기간제 사업자들의 투쟁

방송을 제작하는 노동자들을 외부업체 등으로 방출하지 못해 안달을 할까?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하청업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방송 제작 시스템 속에서 하청업체들이 저작권 등 예민한 부분을 위반할 경우 본사는 이를 모르쇠하며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지금처럼 케이블TV와 외주제작사의 난립은 시청률 경쟁 속에서 더욱 질 낮은 방송을 강요하게 된다. 방송 제작시스템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제작사를 밀어내는 이른바 ‘플래툰 시스템’으로 외주제작사들의 목줄을 잡고 흔들고 있다. 그리고 방송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방송국이 가로채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말 그대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 것이다.

방송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낳고 있는 이러한 제작시스템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된 저항과 파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MBC 노조가 미디어 악법에 반대하는 요구를 들고 파업을 결의했을 때 정작 TV프로그램 송출에 큰 영향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침방송부터 드라마 예능까지 외주제작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대체 투입할 인력이 많기 때문이었다.

노조 조끼도 없는 미조직 외주제작사의 노동자들은 파업의 빈 자리를 메우느라 어김없이 일선에 투입된다. 따라서 외주화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도 분리되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힘든 투쟁으로 여름을 나고 있는 KBS 비정규직 사원들이 승리해 방송계 종사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개선된 제작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희망한다.

윤지혜 독립PD



리뷰

우원석 영화칼럼

〈반두비〉를  
권하며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는 한국 여고생 민서와 이주노동자 청년 카림의 색다른 우정에 관한 영화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의심쩍은 등급판정 - 영화제 상영 때와 달리 극장 개봉 때 관람등급이 갑자기 높아졌다. 영화 속에 담긴 MB 비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의혹이 있다 - 때문에 논란이 됐던 이 영화는 착취와 멸시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

먼저 속내부터 털어놓아야겠다. 나는 〈반두비〉가 재미없었다. 독립영화가 얼마나 험난하게 제작되는지 짐작되고, 주제의식과 소재도 진중하기에 호감을 품고 관람했다. 하지만 영화적 감흥을 느끼긴 어려웠다.

반쯤은 내 탓일 게다. 스타일에서든 내용에서든 극단적인 영화를 선호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내 취향이다. 비교적 얌전하고 심심한 이 영화와 나라는 관객의 궁합은 애당초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영화 맛이 아닐까 싶다. 내 생각에 이 영화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 캐릭터들이 너무 전형적이다. 모두들 착하고 약하기만 하며, 피해자로만 일면적으로 그려진다. 특히 도덕 교과서 같은 주인공 카림 캐릭터는 생동감이 없다. 입체적이지 못해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게 카림 혼자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여고생 민서 캐릭터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민서는, 예컨대 그녀의 엄마와 함께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빛을 발한다. 생동감과 깊이가 있고, 또 그 깊이만큼 정확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민서가 카림을 만나기만 하면 멍달아 뻘해지고 얌아진다. 도식적인 카림 캐릭터와 호흡을 맞춰야 하다 보니 그런 것이다.

카림과 한국인들의 갈등 장면들도 대체로 월급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한국인 캐릭터들은 다들 그런 편견들을 너무 쉽게 내뱉고 어설픔게 공격적이다. 갈등의 전개양상도 너무 예측가능해서 갈등의 끝이 깊어져도 긴장을 느낄 수 없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도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예술과 정치

예술은 정치가 아니다. 예술은 지배관념을 확산하는 사람들에게 불확실함을 심어 주고 낯은 신념을 의심하게 해야 한다. 반면, 정치는 지배관념을 불신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실함을 심어 주고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는 이성애, 예술은 감성에 뿌리를 둔다. 그런데 〈반두비〉는 감성보다는 이성, 즉 정치적 올바름을 너무 의식한다. 예술적 불확실함보다 정치적 확실함을 심어 주려는 의욕이 너무 과하다. 이 점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과 사건 전개를 도식적이고 경직되게 만든다.

그래도 나는 〈반두비〉를 권하겠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이 영화의 화두는 시의적절하다. 시대적 상황이 부여해 주는 품격이 있다. 재미있는 영화는 흔하지만 품격이 있는 영화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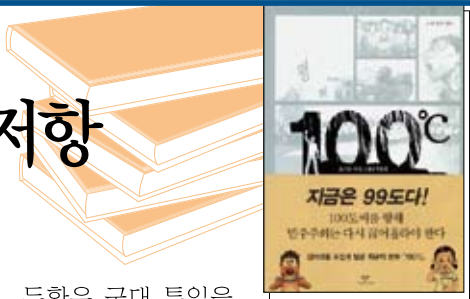
결들여서, 이와이 순지 감독의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1996)를 권한다. 영화를 벌기 위해 각국에서 모여든 이주노동자들이 주인공들인데 배경이 가상의 시대라 살짝 SF적인 느낌도 드는, 한 소녀의 흥미진진한 성장영화이다. 일본 사회현실도 낱카롭게 파헤쳤고, 캐릭터들도 풍성하고 입체적이라 영화적 감흥도 크다. 가수이자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나오는 차라의 노래들도 매력적이다. (말 나온 김에 같은 감독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2001)도 패키지로 권한다.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성장영화인데, 영화에 묘사된 일본 사회현실이 무척 섬뜩하다. 인기 여배우 아오이 유우의 출세작이기도 하다.)

영국의 인종차별과 동성애를 다룬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1985)로 유명한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더티 프리티 씽〉(2002)도 추천한다. 나이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런던의 어느 이상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범죄 스릴러다. 불법체류 중인 주인공은 영국 이민국 직원들에게도 시달리지만 무시무시한 범죄조직에게도 시달리게 된다. 스릴 만점이다. 사회현실도 무게감 있게 다루었다.

우원석  
영화감독 / 뉴욕에서 영화 공부를 했고 지금 작품을 준비중이다

《100℃》(최규석, 창비, 212쪽, 12,000원)

만화로 보는 1987년 6월의 위대한 저항



“경찰은 야권의 내일 집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 ... 검찰도 내일 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하게 다스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명박이 어지간한 집회는 죄다 원천봉쇄하는 지금, 위와 같은 소식은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저 소식은 바로 1987년 6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이다.

이명박의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실제 국민의 67퍼센트가 이명박 취임 후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원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을 보며 독재 정권의 폭정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선 위대한 저항의 역사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을 만화로 그린 《100℃》는 뜨거웠던 저항의 순간들을 생생히 불러 온다.

《100℃》는 투철한 ‘반공 소년’이 대학 입학 후 1980년 광주 학살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실제 수많은 대학생들은 광주항쟁을 보면서 ‘각성’했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활동에 투신했다.

당시 독재 정권의 억압은 혹심했다. 경찰과 안기부는 재야인사와 학생들을 끌고가 고문하기 일쑤였고 성고문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1986년 10월에는 건대에서 열린 반외세 반독재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1천2백90명을 구속해 단일 사건 최대 구속자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탄압의 강화는 정권의 위기 의식도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85년에는 대우차 파업, 구로동맹 파업 등 노동자 운동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1986년 상반기에 입건된 ‘학원 소요 관련자’는 전년 대비 5백77퍼센트로 증가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던 당시의 경제 상황과 독재자 마르코스를 끌어내린 필리핀의 ‘피플 파워’도 이런 저항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를 억누르려는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 박종철

이 물 고문을 당하다 숨졌다. 전두환은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려했고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가증스런 경찰의 발표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4월 13일, 독재 정권은 호헌 조처를 발표했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강그리 무시하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오만방자한 정권의 태도는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호헌 반대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야당과 재야, 학생, 종교 단체들은 호헌철폐민주헌법정착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해 민정당(한나라당의 전신)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날인 6월 10일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만방자한 정권

6·10 대회 전날 연세대 학생 이한열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고, 6·10 당일 경찰은 무려 3천8백31명을 연행했다. 서울 시내의 계엄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국본에서 6·10 대회 때 경계를 울리자고 제안하자 심지어 정권은 버스와 택시의 경음기를 떼어 가기도 했다. 독재 정권은 보름 남짓 동안 최루탄 35만 발을 시민들에게 쏘아댔다.

그러나 정권의 이런 폭압으로도 붕괴처럼 터진 민주화 요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 6월 26일에는 전국적으로 1백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무력 진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전



독재정권은 물고문으로 박종철 열사를 살해했다.

〈바더 마인호프〉영화평 (7월 23일 개봉)

세상을 바꾸려 한 테러리스트들

이언 버철 영국의 사회주의자, 역사학자

〈바더 마인호프〉는 한 무고한 사람이 무시무시한 폭력배들에게 추격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사람은 서독 대학생으로, 그는 감히 이란 사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에 가담했던 이유로 서베를린 경찰에 의해 살해된다.

이어 영화는 베트남 전쟁 영상을 보여 주고, 그 다음에 한 열광적 극우파 지지자가 황색 언론의 선동에 자극 받아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 루디 두치게 암살을 시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바더 마인호프〉는 바더마인호프단 얘기를 다룬 영화다. 1970년대 초 그들의 은행 강도, 암살, 납치는 서독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영화의 원작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쓴 스테판 아우스트의 책이다. 이 영화는 바더마인호프단의 행동이 서독과 미국이 저지른 잔혹한 폭력의 산물임을 잘 보여 준다. 이 영화는 국가 테러에는 눈을 감으면서도 개인 테러에 관해서만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도덕군자들의 편을 들지 않는다. 바더마인호프는 47명을 죽였다(전부가 ‘무고’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떨어뜨린 폭탄 한발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두환은 군대 투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항이 워낙 거세 군대를 투입한다 해도 진압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두환은 쿠데타 동료인 노태우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한다. 위대한 저항 운동이 독재 정권을 무릎 꿇린 것이다. 물론, 운동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정권의 ‘꼼수’도 있었지만 말이다.

이명박의 앞뒤없는 반동 공세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겐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운동 내에서는 부르주아 야당인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6월 항쟁 당시 자유주의 야당들은 운동에서 불철저하고 기회주의적이었다. 이들은 여야 영수회담 같은 정치협상에 기대며 최대 규모였던 6·26 집회 개최를 반대하기까지 했다.

《100℃》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주화를 되돌릴 수 없게끔 썰기를 박은 것은 6월 항쟁 이후 벌어진 노동자들의 대공세였다. 7~9월의 거대한 파업 물결은 군부가 독재를 다시 시도도 하지 못 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점이 반동 쿠데타로 무너진 4·19 혁명과 다른 측면이다.

이는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것조차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결정적임을 보여 준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생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야당과 연대를 할 때조차 그들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와 비판이 필요하며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6월 항쟁의 교훈일 것이다.

물이 100℃가 되면 끓듯이 사람들의 분노도 어느 정도를 넘으면 투쟁으로 끓어오른다는 것이 이 책 제목이 뜻하는 바다.

이명박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99℃까지 오른 지금, 분노가 끓어 독재 정권을 굴복시킨 위대한 저항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는 것은 뜻있는 일일 것이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인호프단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지다. 사실, 그들도 몰랐다. 바더는 “정치 상황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떻게 바꿀거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가 할 테니 잘 봐.”

서독 국가는 소규모 게릴라 집단이 상대하기에 너무 막강한 상대였다. 바더마인호프 그룹이 대중 일부의 동정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집단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바더마인호프단도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바더마인호프단은 체계바라를 모델로 삼았다. [체계바라가 무너뜨린] 1959년 쿠바 바티스타 정부는 보호자인 미국 정부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극도로 부패하고 악한 정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서독 상황은 달랐다.

〈바더 마인호프〉는 잘 짜인 영화다. 상영시간이 2시간 30분에 이르지만 버릴 장면이 없다. 폭력 묘사는 사실적이지만, 잔혹한 묘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단식농성 중인 바더에게 강제 급식을 하는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며,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된 시위대에 대한 폭력 장면은 마치 바로 옆에서 보는 듯 생생하다. 〈바더 마인호프〉는 〈알제리 전투〉에 버금갈 걸작은 아니지만, 한 번 보고 토론할만한 좋은 영화다.



## 동유럽 몰락 20주년

## 두 얼굴의 ‘민주주의’

1989년 폴란드 민중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폴란드 경제는 여전히 한 줌도 안되는 엘리트들이 통제하고 있다. 영국의 계간 사회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크리스 하먼**이 이러한 간극의 배경을 설명한다. 크리스 하먼은 다함께가 주최하는 진보 포럼 ‘맑시즘 2009’의 주요 연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기념식이 늘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폴란드 지배자들은 지난달 그단스크시(市) 조전소 밖에서 기념식을 열고자 했다. 1989년 여름, 40여년 만에 최초로 자유선거를 치른 폴란드와 헝가리의 정치적 변화를 기념하려는 것이었다.

그단스크는 폴란드 저항 운동의 요람 같은 곳이다. 그래서 폴란드 저항 운동의 적자를 자처하는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애초 이곳에서 기념식을 열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기념식 장소를 폴란드 영토의 반대편 끝 크라코프로 옮겨야 했다. “이 기념식이 경찰과 노조원들의 격렬한 전장으로 바뀌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폴란드 라디오는 보도했다.

그렇다면, 총리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기념하려 했던 변화를 바로 그단스크 노동자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89년의 진정한 의미도 드러났을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1989년을 한편에선 자유와 민주주의가 도약한 해로, 다른 한편에선 ‘사회주의’의 경제적 파산을 증명한 해로 묘사해 왔다. 헝가리 의회에 최초로 입성한 저항 운동가 GM 타마스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최근 호[123호, 2009년 여름호]에서 주장했듯이, 이것은 당시 저항 운동 지도자들 압도 다수가 받아들인 환상이기도 했다.

수많은 노동자·학생·농민·지식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중요한 문제였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고, 지배자들의 행위에 의회 절차를 통한 제한적인 영향력도 행



1989년 5월 1일 바르샤바에서 연대노조 깃발과 배너를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9년의 변화는 아주 제한된 형태의 자유와 민주주의만을 가져다 줬다.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수단은 여전히 극소수 특권층이 통제하고 있다. 국영 언론이 백만장자에게 넘

어갔을 뿐이다.

민주주의 제도들은 서방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협소한 의미에서 ‘정치적 문제’에 한정됐다. 대중은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경제적 문제,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

동유럽의 구체제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에 바탕을 둔 사회가 아니었다.

개혁은 점차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 대중에게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아주 조금 허용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에서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대중이 아니라 사적 자본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 통제권

1989년은 동유럽과 옛 소련에서 실시된 경제 조치들이 거의 파산했다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난 해였다.

전후 20~30년의 고성장 국면이 끝나자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1970년에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겪은 폴란드는 1970년대 말에 다시 위기를 겪었고 1980년대 초에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헝가리는 ‘굴라시 공산주의(소비 물자 증산과 생활 수준 향상을 강조한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을 위해 서방 은행들에게서 막대한 외채를 끌어들이며 처음에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서 헝가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옛 소련도 경제 위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대처 방식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했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1980년, 폴란드에서는 사상 최대의 노동자 운동이 등장했다. 노동자들이 점거한 조선소와 공장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폴란드 연대노조(솔리다르노시치)는 16개월 동안이나 폴란드 국가와 거의 맞먹는 대항 권력으로 존재했다.

이 운동은 1981년 말 군사 쿠데타로 분쇄됐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 문서를 보면, 1988년 소규모 파업이 번지기 시작하자 지배자들은 대항 권력이 다시 등장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들은 저항 세력들과 전례 없는 “원탁회의”를하기로 결심했다. 정권의 상층부는 혁명을 막으려면 개혁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즉, “현상 유지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배자들과 협상에 나선 것은 노동자들이 직접 뽑은 대표자들이 아니라 대체로 지식인들이었다. 이 지식인들은 시장과 민주주의가 번영과 자유를 약속하는 쌍둥이라며 노동자들에게 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런 주장에는 늘 결정적 문제가 있다. 동유럽의 구체제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에 바탕을 둔 사회가 아니었다. 이 체제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독단적 지배자들이 운영했고 서방 국가들과 경제적·군사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것이 그 체제의 경제적 동학을 결정지었고 동유럽 경제는 갈수록 스테그네이션과 위기로 치닫는 경향을 보였다.

1989년의 변화도 이런 경향을 없애지 못했다. 세계 시장이 낳은 문제들이 세계 시장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해서 해결될 순 없었다. 경기침체를 거듭하던 동유럽과 옛 소련 경제는 결국 1990년대 초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간간히 회복 조짐을 보긴 했지만 오늘날 동유럽은 경제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이다.

동유럽 대중은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를 또 다른 자본주의 체제로 바꿨지만 그것이 썩 좋은 거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 쓰라림이 기념의 요지다.

번역: 조영훈 기자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9년 7·8월 호

《교사를 위한 변명 – 전교조, 그 스무 해의 비망록》 (윤지형, 우리교육, 272쪽, 13,000원)

## 시국선언으로 MB와 정면대결하는 전교조가 걸어온 길

“죽어간 아이들이 햇볕로 살아온다!” 1989년의 어느 뜨거운 날, 응어려졌던 더운 숨결이 전국을 가득 채웠다.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 억눌려 온 민주주의와 ‘참교육’에 대한 열망이 억압을 뚫고 전국의 교사와 학생, 시민들의 가슴에까지 분수처럼 치솟았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을 위해 전국에서 서울로 향했던 한국의 교사들은 바로 이 사회의 주인공이었다. 그들은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군사독재 정부의 후예에 맞서 이 땅의 민족·민주·인간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통한을 대변했다. 그들은 생계를 잃고 사랑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2009년 여름, 전교조는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공공의적 이명박은 피와 눈물로 정취해 낸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 한다.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전교조는 20년 전 그랬던 것처럼 떨치고 일어섰다. 그들은 참가자 전원 징계 위협 속에서도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1차



2007년 7월 5일 전교조 전국분회장결의대회에 참가한 교사

선언자 1만 7천 명에 대한 탄압이 있지만에는 더 많은 참가자들을 조직해서 2차 선언을 발표하겠다고 호기 있게 받아치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강권 통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저항에 나서게 하는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교사를 위한 변명》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 그 자신이 해직교사였고 전교조 결성 투쟁의 일원이기도 했던 저자는 20년간 실 새 없이 달려온 교육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익들의 공격에 맞서 전교조를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이고 용감할 수 있었는지, 앞으로 교육운동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주장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보수언론과 우익들은 전교조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 그들에게 전교조는 “‘선생님’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가짜 선생님, 선생님이로 위장한

싸움꾼의 집단”(2006년 7월 27일치 〈조선일보〉칼럼)이다.

그러나 이 책의 살아 있는 사례들은 “‘교육운동’이나 ‘교사운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전교조 교사들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이라 불릴 만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교육운동 탄압에 분노해 단식 투쟁을 벌이다 위암으로 사망한 신용길 교사, 징계위원회에 출두만하면 파면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맞서 교육자적 양심을 지키려다 지병으로 사망한 이순덕 교사, 해직된 뒤 생계의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외딴 자취방에 스며든 연탄가스에 질식사 사망한 배우영 교사 등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운동, 민주화운동의 대의를 우선시했다. 이 사회의 민주화와 평등한 교육을 위해 싸워 온 전교조 교사들, 누가 감히 이들을 ‘가짜 선생님’이라 말할 수 있는가. 최근에도 입시지옥을 강화하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 십수 명이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의 공격 속에 해임·파면된 바 있다.

그러나 ‘교사도 노동자다’는 각성 속에 붓물처럼 일어났던 전교조 결성·사수를 위한 투쟁은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억압적 정부와 맞닥뜨리며 교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사회 전체의 진보·민주화와 연결돼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왔다. 이 깨달음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선사하고 싶다는 열망, 가르친 것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보여 주고 싶다는 열망과 합쳐졌다.

이 책은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바라는 교육운동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의식을 성장시킨 교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입시지옥을 강화하고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조익진





##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 ①

## 소외란 무엇인가?

〈레프트21〉은 이번 호부터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개념과 쟁점들을 다루는 연재를 시작한다. 첫 주제는 소외다.

**이스트반 메자로스**는 게오르그 루카치의 제자이자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로 그의 《마르크스의 소외론》은 세계적 명저로 손꼽힌다.

소외는 문학 창작물뿐 아니라 철학, 정치학, 심리학과 사회학 저작에서도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 중 하나다. 심지어 대중 매체에서도 거의 매일 접할 수 있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소외의 경험은 부정적이어서 사람들이 이 고통스런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무언가 하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소외에 맞서는 것은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왜 그런가? 전지전능해 보이는 이 소외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랫동안 모든 인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해야 이 소외를 없앨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 인간의 소외란 기본적으로 ‘통제력의 상실’을 뜻한다. 개인들이 적대적이고 해로운 힘으로 직면하게 되는 외부 세력에게 통제력이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 속에서 개인들의 목표와 의도는 무시되고, 개인들은 외부 세력의 결정에 종속되게 된다.

마르크스는 <1844년 경제·철학 수고>를 쓰면서 네 가지 소외를 제시했다. (1) 인간의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2) 자기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3) 종(種)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4)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마르크스는 이런 소외가 결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래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갈등인 소외를 숙명으로 잘못 이해하면, 결국 소외를 해결하기보다 가만 놔두는 오류를 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소외가 사회적·역사적 발전에서 미리 결정된 과정이 낳은 불가사의한 결과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적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늘날 인류의 생존 자체가 인간이 낳은 군사적 충돌과 자연 파괴로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 자신이 인간 스스로에게 부과한 가장 극단적 형태의 소외다.

그러나 인간 문명의 잠재적 종말을 향한 위험한 과정은 중단없이 지속되고 있다. 마치 인간 문명의 파괴를 바라는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뒤에서 그 과정을 조종하고 있는 듯이 말이다. 긍정적 결과를 바라는 인간 주체의 노력을 무로 돌리는 것만큼 소외의 힘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

소외는 물질적 생산에서 예술 창작까지 모든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마르크스는 소외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사상가는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소외를 사회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소외 문제를 완전 새롭게 해석했다.

마르크스보다 앞선 시대 사람 중에서 소외 개념에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은 헤겔이었다. 그의 거창하고 관념론적인 추상 이론에서, ‘외재화’와 ‘대상화’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소외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헤겔은 소외를 상상 속의 개념적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회계급 간 불평등



기계에 종속된 인간 —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소외를 경험한다.

같은 ‘외재화된 소외’의 가장 고통스런 표현조차 현실에서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비록 헤겔이 사고 속에서 그들을 ‘극복’하고 ‘화해’시켰지만 말이다.

헤겔이 긍정적인 것으로 지목한 이런 ‘소외의 소외’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빈민의 종교적 체험이다. 헤겔은 빈민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뒤로 하고 성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즉, 빈민은 ‘소외된 사회적 존재인 자신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소외시킴’으로써 ‘왕자와 동등해 질 수 있다.’ 물론, 빈민이 성당을 떠나 자기 오두막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래적 존재를 회복할 때까지만 말이다.

마르크스는 다양한 형태의 소외 중에서도 노동의 소외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사회적 실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외재화’ (혹은 ‘삶의 발현’)와 ‘삶 활동의 소외’를 구분했다. 인간이 창조한 대상은 인간 생산 활동이 대상화·외재화한 것이며, 개인들 삶의 발현체다. 반면에 자본주의적 착취뿐 아니라 인간노동 — 그리고 생산과정에 노동자의 능동적 참여 — 을 통해 생산된 대상의 상품화는 삶 활동의 소외인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은 보편적 판매 가능성이 일반화되는 과정이다. 심지어 예술과 문학 같은 가장 고상한 창조물을 포함해 인간노동으로 창조된 모든 대상은 판매가능한 상품으로 전화된다. 동시에, 산노동 자체도 물건, 즉 판매 가능한 상품이 돼, ‘노동시장’에서 사고 팔리게 되며,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사물화’ 된다. 그에 따라 ‘상품 물신성’이 삶의 모든 영

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상품 물신성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자연질서’처럼 보이게 된다.

이런 인간관계의 실질적 전복(顛覆)과 ‘상품화’ 속에서, 사회적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의 의미도 전복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상대적 조건들 사이의 실제 관계도 거꾸로 뒤집힌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과 자연 전체를 연결해 주는 생산활동은 인간의 절대적 존재 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이 자연의 역할을 끊임없이 침범하면서 이 연결이 약해지고 위험에 처하게 됐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창조된(그래서 역사적으로 초월가능한) 자본주의 체제만의 부차적[상대적] 조건들이 절대화된다. 그것의 핵심 요소인 자본주의적 사유재산, 시장의 규제를 받는 교환, 구조적으로 부과된 위계적인 사회 노동 분업(지배 이데올로기는 이것과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노동 분업이 동일한 것처럼 말한다)과 현대 국가가 절대화, 혹은 ‘외재화’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사회적·역사적 발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실질적 소외 과정을 통해 자본 확대가 사회적 생산을 규제하고 다른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 그 결과가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말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필요를 ‘성장’과 거짓 일치시키거나, 인류 다수의 가장 기본적 욕구는 무시하면서도 이윤을 위해 ‘인공적 필요’를 창조하는 등 인간의 필요는 자본 확대의 필요성에 강제로 종속되면서 왜곡된다.

동시에 현대 국가 — 자본주의 체제의 포괄적인 정치적 지휘통제부 — 는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에 내재된 위계

적·구조적 지배를 무력을 동원해 보호한다. 소외는 실제적 사회 과정이기 때문에, 오직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 진정한 사회주의적 전환 — 만이 소외의 비인간적 영향을 치유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 불평등과 소외를 ‘누진세 부과’로 ‘분배를 좀더 평등’하게 만들어 해결하려는 개혁주의 시도들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는 사회에서 철저히 실패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소수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적대적인 사회계급으로 나뉘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시도 — 물론 개혁주의보다 좀더 고상한 의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 로 미학적 교양을 통해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공상적 시도가 있다. 이것은 여러 형태로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도 지적했듯이 “궁핍으로 찢든 사람은 최상의 연극을 만끽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광물 상인은 광물에서 아름다움과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 오직 상업적 가치만을 본다. 그는 광물학에는 관심이 없다.”

미학적 교양만이 아니라 교양 일반은 소외에 맞선 투쟁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진적 사회 변화를 대체하는 공상적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그 변화와 밀접히 연관될 때만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급진적인 사회 변화만이 현실의 소외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차승일·김영욱

출처 :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종합

# 왜 민주주의의 요구와 반자본주의의 요구는 결합돼야 하는가

운동의 전략이 반독재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전선은 반독재 민주주의 전선이므로 현 상황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요지는 이명박 정부라는 커다란 적과 싸우기 위해 ‘이명박 빼고 다 모이자’는 것이다.

다소 과도하긴 하지만, 리영희 명예교수가 “이명박 통치 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의 초기”라고 우려했을 만큼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역진(逆進) 시도는 노골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격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것의 사회적 내용, 즉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조직과 운동과 행동이다. 그러므로 반자본주의 좌파는 일관된 민주주의자로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에 저항하는 운동과 함께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은 지배 계급이 느끼는 경제 위기 공포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명박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시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더는 내놓고 하지 못한다. 자본주의를 정당화했던 주장들이 모두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배 계급은 자신들의 단기 처방이 통할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정부가 하는 ‘복잡한’ 일들이 모두 위기를 낳은 상층 계급의 탐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거듭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경제학’이 거대한 규모로 ‘정치학’으로 변모할 수 있다. 마치 2001~2002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경제 붕괴 때문에 거대한 정치 위기가 발생해 사람들이 거리를 점거하고 네 명의 보수적 대통령을 몰아냈던 것처럼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공격은 이런 상황을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이다. 요컨대, 오늘날 민주주의 문제의 부상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관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진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제는 ‘뺑’이나 ‘계급’보다 ‘가치’ [민주주의]”(고원 상지대 교수, <프레시안>, 2009년 7월 2일차)라는



1998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 당시 독재자 수하르토를 몰러나게 만든 인도네시아 민중항쟁

식으로 민주주의와 계급 문제를 대립시켜 후자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점에서 1990년대 혁명적 격변들이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990년대 혁명적 격변들의 경험

1989년에, 부분적으로는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에 의해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붕괴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남

아공의 아파트헤이트가 대중 운동에 의해 절멸됐다. 1998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정치화한 학생 운동이 선봉에 선 대중 봉기에 의해 수하르토 장군의 32년 독재가 타도됐다.

이 사회들의 혁명적 위기들은 모두 자본 축적의 위기였다. 전후에 형성된 특정한 형태의 국가 주도 자본 축적이 1970년대 말 장기 호황 끝무렵에 등장한 세계적

규모의 자본 축적이라는 새로운 조건들에 들어맞지 않다는 점이 입증됐다.

그러나 혁명적 격변들은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에 도전하는 것으로까지 최종 나아가지 못했다. 이 나라들에서 운동의 지도자들이 미완의 민주주의 과제와 이론과 실천에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프로젝트와 융합하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유럽에서는 제한된 형태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뤄졌지만, 대중은 자기 삶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문제에 대해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남아공에서는 정치적 아파트헤이트가 절멸되고 ANC 정부가 15년 동안 통치하고 있지만 흑인과 백인을 갈라놓는 물질적·사회적 분리는 여전하다. UN에 따르면,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도시다. 인도네시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유럽, 남아공, 인도네시아는 산업화한 사회였고, 지배 계급은 자본가 계급이었으며, 노동계급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자주적 조직과 발전한 계급 의식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산업 발전 수준, 노동계급의 제한된 규모·조직·의식 때문에 혁명 진영 내부의 투쟁에서 사회주의가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영국(1649년), 미국(1776년), 프랑스(1789년)의 혁명과는 달랐던 것이다.

실로, 폴란드와 남아공 투쟁의 결정적 국면에서 조직된 노동계급이 그 반란의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운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안착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그 운동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은 부차적이 될 것이다.

실제 이 나라들에서 운동의 지도부(폴란드의 노동자방어위원회; KOR, 남아공공산당; SACP, 인도네시아의 민중민주당; PRD)는 노동계급의 의식과 활동을 당면한 민주주의 과제에 가렸다.

운동의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의 발전을 방해했고 노동계급의 열망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못 미치는 목표를 위해 계급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투쟁할 때 노동계급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파업, 총파업, 노동자 평의회 등등. 이 투쟁 방식들은 권위주의 정권만만이 아니라 자본가도 정면으로 겨눈다. 그들은 “누가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물음만이 아니라 “누가 공장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물음도 제기한다. 따라서 운동의 전략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로까지 확장시키는 근본적 사회 변혁(즉, 경제적·정치적 변혁)이 돼야 했다.

그러나 KOR와 SACP, PRD는 운동이 실제 이를 수 있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목표 달성에 안주함으로써 투쟁을 사실상 무장해제했다.

## 정치적인 네트워크

이 패턴이 오늘날 한국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운다면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위해 노동계급적 요구를 배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지만, 그것은 계급 분단이 아니라 정치전략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 둘은, 비록 지배계급 내 다수파와 소수파라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동일한 계급배경(자본가 계급)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당이 17~18세기 봉건 왕정과 맞서 싸웠던 선조 부르주아 혁명가들의 혁명적 과거를 재현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문제에서조차 일관성이 없는 까닭이다. 이로부터 생겨나는 정치적 공백을 노동계급이 메우면서 민주주의 과제와 반자본주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정치적·이론적으로 명료한 정치적인 네트워크, 즉 근본적 사회 변혁 정치 단체의 능력이다.

김인식 kis@lef21.com

## 독일

# 학생 25만 명이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독일의 좌파당 디링케(Die Linke) 내 국제사회주의 경향 ‘마르크스21’의 회원인 로렌이 이 시위와 관련한 글을 <레프트21>에 보내 왔다.

지난달에 독일 학생 운동이 중요한 전진을 이룩했다.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25만 명이 일주일 동안 시위와 동맹 휴업을 통해 정부의 교육비 지출 삭감과 대학 체계 개편 계획에 반대했다. 정부 계획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것이다.

참가자들과 언론인들에 따르면, “전국적 교육 파업”은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 학생 시위였다. 6월 15~19일에 전국 1백여 개 도시에서 행진, 점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벌어졌다.

이 시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전국 수준에서 긴밀히 협력한 지역 계획들이 연결됐기 때문이었다.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자기 지역에서 시위와 행동을 계획했고, 이 행동들을 나라 전역에서 다른 활동가들과 조율했다. 시위들이 동시에 일어났고 비슷한 요구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



‘연대를 위해’ - 6월 18일 동맹 시위를 벌이는 독일 학생들

고 이것이 언론에 영향을 미쳤다. 독일 학생 운동에는 중앙집중적 구조에 대한 전통적 거부감이 존재한다. 활동가들은 이런 정서를 거슬러 지역적 자율에 대한 요구와 대규모 협력 사이에 균형을 이룸으로써 전국적 정치 투쟁 주간을 효과적으로 건설했다.

이 기간 동안 창발적인 행동들이 많았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최대 2만 명이 모였던 대규모 시위들뿐 아니라 대학 건물과 본관 점거, 정치 이론과 행동에 대한 대안적 세미나들이 있었다. 많은 활동

가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6월 19일 목요일에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이었다. 몇몇 도시들에서 학생들은 대중 집회들을 조직했고 그 와중에 은행들을 일시 점거했다. 정부가 수백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한 은행들이었다. 독일 국가는 여기저기서 은행과 기업 들을 구제하면서도 교육에 쓸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독일 국가의 위신을 밝히 보여 준다. 베를린에서만 세 개의 은행을 점거했고, 그 뒤 경찰서에 구금돼 있는 70명의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강력

하고 활력 있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디링케의 학생 그룹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운동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우리는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들이 학생들의 저항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또 그렇게 됐다. 광범한 사회 세력들과 학생 운동의 융합은 정치적 효과만이 아니라 대중적 호소력 확대에도 보탬이 됐다.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퍼센트가 학생들의 동맹 휴업을 지지했다. 이 수치는 당연히 노동조합들의 지지가 보태진 덕분이다. 노동조합의 시위 참가는 또한 학생들의 힘을 강화시켰다. 계급적 지위 때문에 학생들은 그 자체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생산양식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노동자들처럼 경제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오직 학생과 노동자가 단결할 때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시위 주간에 끝나고 나서 조직자들은 다음 학기 때까지 시위들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동안 계속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운동에 비생산적이

고 해를 끼칠 것이었다. 운동은 전략적으로 조직하는 법과 정치적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운동 내 초좌파 그룹과 자율주의 그룹 들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위 전면 재개를 고집했다. 그러나 운동의 다수는 적절한 때까지 힘을 비축하자는 주장을 채택했다.

그러나 운동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동맹 휴업의 조직자들은 벌써부터 이번 가을에 또 다른 투쟁 학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운동에서 결정적 요소는 학생과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에서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될 것이다. 독일 학생 운동 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도 투쟁하는 포괄적이고 광범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학생 운동의 성패는 다음 경우에 달려 있다. 학생들이 노동계급과 동맹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느냐는 문제, 또 학생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 학생들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초좌파적이고 폐쇄적인 일부 조직들을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적이다.

번역 김인식



#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을 말하다 | 제10회 다함께 진보포럼

# 맑시즘2009

2009년 7월 23일(목) ~ 26일(일) | 장소: 고려대학교 | 주최: 다함께

## 맑시즘2009 개막식



· 위기의 시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투쟁  
사회: 김하영 \_ 다함께 운영위원

이정아 \_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탈라트 아흐메드 \_ 인도 출신 여성 사회주의자

최상재 \_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조연희 \_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정태호 \_ 고려대학교 42대 총학생회장

김지윤 \_ '고대네'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학생 / <레프트21> 기자

## 좌파 경제학자들의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논쟁



· 우석훈이 진단하는 한국 경제, 문제와 대안

발제자: 우석훈 \_ 《88만원 세대》 저자

토론자: 강동훈 \_ <레프트21> 기자



· 마르쿠스주의로 본 오늘의 경제 위기, 원인과 대안

발제자: 정성진 \_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유철균 \_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경제학)



· 금융세계화의 시각에서 본 오늘의 경제 위기

발제자: 이종태 \_ 금융경제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토론자: 이정구 \_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알기 쉬운 자본론 썩썩 강의 ① ~ ③

## 그리고 김규향·하종강·고재열·우석균 등이 연설하는 50여 개의 강연



· 이명박 정로 치하 — 예수님의 삶에서 진보의 희망을 찾다

김규향 \_ 《예수전, 나는 왜 불운한가》 저자

·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하종강 \_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독살닷컴 고재열, 이명박의 민주주의를 말하다

고재열 \_ 《사상IN》 기자 / 블로그 '독살닷컴' 운영자

·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과학을 조작하는가

우석균 \_ 보건 의료단체인한정해실장

###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다

- 미디어쟁: 무엇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니?  
이강택 \_ KBS PD, 전 PD연합회장
- 패널리스트 한국 사회의 변혁과 민주주의  
윤용배 \_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전지윤 \_ 다함께 운영위원 ...

### 청소년을 위한 교실 밖 이야기

- 숨 막히는 이명박식 경쟁 교육  
최혜원 \_ 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송조은 \_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청소년 활동가
- 한국 현대사 속의 민주주의  
김광규 \_ 인천서정여고 역사 교사
- 이주자,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_ 마블 알업 펄럼
- 스톤월 항쟁 40주년 — 성소수자들의 삶과 투쟁  
정을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 경제 위기와 저항

- 패널리스트 경제 위기 시대 노동운동 — 진정한 혁신과 연대 전략은 무엇인가  
김장호 \_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실장  
최윤정 \_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전 정책국장  
정종남 \_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

### 환경

- 마르크스주의는 반생태적인가?  
최병두 \_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 경제 위기와 지구온난화  
이유진 \_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 팀장  
장호중 \_ <레프트21> 기자
- 대운하의 새 이름, '4대강 살리기' — 녹색 성장의 길인가?  
김정옥 \_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모임 공동대표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쟁점별로 파헤치기



·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 —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크리스 하먼 \_ 영국의 좌파 이론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 오바마의 '뉴딜'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장시복 \_ 목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저자

· 중국은 세계 경제 위기의 구원자인가?

이정구 \_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맑스 vs 케인스 vs 플라니

이정구 \_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사회적 기업, 공정부역 ... —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강동훈 \_ <레프트21> 기자

·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인식 \_ <레프트21> 발행인

## 십중팔구 맑시즘2009에만 있는 ...

· 사발턴과 포스트식민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탈라트 아흐메드 \_ 인도 출신 여성 사회주의자 / 골드스미스 런던대학 남아시아 역사학 강사

· 자본주의와 예술

이기용 \_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 마르크스주의는 반생태적인가?

최병두 \_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 다윈 200년,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다윈은 유전자 결정론자였는가?

최종덕 \_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프로그램 위원장

· 마르크스주의적 성서 읽기

김원일 \_ 미국 라씨에라 대학교 종교학 교수

### 도시와 빈곤

- 저자에게 직접 듣는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규 \_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 용산철사 6개월, 개발주의와 그 그늘  
최한국 \_ 목사 / 용산철거민 참사 발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이원호 \_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조직국장

###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 중국은 세계 경제 위기의 구원자인가?
- 중국 혁명 60년 — 마오쩌둥부터 시창 개방까지
- 이란 — 1979년 혁명에서 최근 반정부 시위까지
- 패널리스트 차베스 집권 10년의 베네수엘라 — 한국에 주는 교훈  
임승수 \_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저자  
이수현 \_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역자

### 오바마와 오늘의 제국주의

- 오늘의 제국주의 — 미국의 몰락과 새로운 강대국들의 부상?  
크리스 하먼 \_ 영국의 좌파 이론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오바마의 수렁이 될 것인가?  
탈라트 아흐메드 \_ 인도 출신 여성 사회주의자 / 골드스미스 런던대학 남아시아 역사학 강사
- 북한의 핵과 오바마, 그리고 이명박  
장병호 \_ <레프트21> 기자

## 진보 운동의 전진을 위해



· 패널리스트 21세기 한국 좌파의 전망

정대석 \_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최일봉 \_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저자



· 패널리스트 진보진영,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경순 \_ 민주노동당 부설 세계상연구소 부소장

김하영 \_ 다함께 운영위원 /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 패널리스트 '운동권 가부장제' 논란 — 진단과 해법

김금숙 \_ 전국사무금속노동조합연맹 여성국장

조이여울 \_ 저널리스트 /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자

최미진 \_ 다함께 운영위원

· 패널리스트 한국 사회의 변혁과 민주주의

윤용배 \_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전지윤 \_ 다함께 운영위원

· 패널리스트 차베스 집권 10년의 베네수엘라 — 한국에 주는 교훈

임승수 \_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이수현 \_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역자

· 패널리스트 위기의 자본주의 — 학생좌파의 대안은 무엇인가

장호 \_ 전국학생행진 운영위원

서범진 \_ 대학생 다함께 정치위원

· 전략과 전술

최일봉 \_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저자

·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김하영 \_ 다함께 운영위원 /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저자

## 폐막 행사

· 야만이나 변혁이나, 위기의 시대 좌파의 과제

크리스 하먼 \_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안명례 \_ 촛불 수배자 김광일 어머니



## 참가 신청

참가비 \_ 하루 : 23일(목) 8,000원, 24(금)~26일(일) 12,000원 / 나흘 : 40,000원  
※ 대학생 할인 \_ 하루 : 23(목) — 6,000원, 24(금)~26일(일) — 9,000원 / 나흘 : 30,000원  
※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할인 \_ 하루 : 23(목) — 3,000원, 24(금)~26일(일) — 5,000원 / 나흘 : 15,000원

www.marxism.or.kr

Tel 02 2271 2395 | marxism2009@gmail.com | blog.marxism.or.kr